

기조발표

민선5기 충남 농정의 비전과 과제

● 발표

박진도(충남발전연구원장)

민선5기 충남 농정의 비전과 과제

1. 왜 민선5기 충남도정은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정의 핵심과제로 하는가?
2. 정부는 그동안 농업·농촌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다고 하는데, 왜 농업과 농촌은 발전하지 못하였는가?
3. 중앙정부는 우리나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4. 충남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충남 농정을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가?
5. 충남 농정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6. 맺음말 : 과연 되겠는가, 누가 할 것인가?

1. 왜 민선 5기 충남도정은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정의 핵심과제로 하는가?

□ 더 이상 경제성장, 수출증대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음

-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국내총생산, 수출, 국민소득은 2배 이상 증가
 - 국내총생산(GDP)은 5,046억 달러에서 1조 143억 달러로 2배. 수출은 1,504억 달러에서 4,664억 달러로 3.1배로 됨. 일인당 국민소득(GNI)도 1만 631억 달러에서 2만 759억 달러로 약2배가 됨
- 이 과정에서 재벌기업은 급성장
 - 2008년 4월에서 2011년 4월 3년 사이에만 우리나라 20대 재벌의 계열사는 36%, 자산은 54% 증가
 - 특히 삼성, 현대 등 5대 재벌의 계열사는 51%, 자산은 59%나 증가
- 그러나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 : 중산층의 몰락과 빈곤층의 증가
 - 중산층(평균 소득의 50-150%)의 비율은 1990년에 75%에서 2010년에는 67%로 감소
 - 빈곤층(평균소득의 50% 미만)의 비율은 7%에서 12.5%로 상승
 - 2004년에서 2009년 사이에 새로 생겨난 사업체와 휴·폐업한 업체수가 각각 연평균 60만개에 이를 정도로 불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음
- 농민들의 경우 특히 그 삶이 나빠지고 있음
 -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농가의 실질소득(명목소득/농가구입가격지수)은 2,796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7.1% 감소
 - 특히 농업소득은 명목으로도 1,127만원에서 1,01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실질소득은 1,318만원에서 817만원으로 무려 38%나 감소
 - 반면에 농가 내부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됨. 즉 5분위 소득비율(상위 20% 평균 소득/하위 20% 평균소득)은 1995년의 6.3배에서 2000년에는 7.6배, 2008년에는 9.4배로 증가
 - 이는 도시근로자의 5분위 소득비율이 같은 기간에 4.4배에서 5.3배로 증가한 것에 비해 보더라도 농촌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줌

□ 충남의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과 수출의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

지만 충남도민의 삶의 수준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함

- 충남의 지역내총생산과 수출의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음
 - 충남의 일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8년에 2,520만원(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울산의 3,100만원 다음으로 전국 2위이며 전국 평균의 1.43배임. 지역내총생산의 증가율은 1998-2007년에 8.4%로 전국 평균인 5.05%에 비해 1.7배에 달함
 - 충남은 2009년 540억 달러 수출로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29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국내무역흑자의 71%를 담당하였음
 - 충남경제의 무역의존도는 2008년에 144.7%(수출의존도 85.7%, 수입의존도 59%)로 전국 평균에 비해 훨씬 높음
- 이러한 화려한 경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민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경제성장률은 높지만 그에 비해 도민의 일자리, 소득과 소비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임
 - 2000-2008년에 충남의 고용 증가율은 1.1%로 전국 평균 1.4%에 훨씬 미치지 못함
- 그 이유는 충남경제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서북부의 재벌계 대기업(삼성, 현대, SK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 충남의 지역내총생산(GRDP)의 68.1%가 서북부 4개 시군에 집중
 - 2004-2008년에 충남에 들어온 3,219개 기업 가운데 60.7%, 이들 기업의 총 취업자 약16만 명 가운데 70%가 4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음

□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세상이 달라지고 있음

- 1국 3중 경제(국민경제 <-> 국제경제와 지역경제)에서 2국 3중 경제(세계경제와 지역경제 <-> 국내경제)로 사회경제시스템 변동
- 1국 3중 경제
 - 과거 박정희 시대에는 수출이 늘어나면 재벌이 돈의 대부분을 벌었지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이 올라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졌음. 즉 그 시대에는 삼성, 현대 등 재벌 그룹의 자본이 한국자본이었고 생산 활동을 한국에서 하였기 때문에 국제경제 부문의 성장은 한국경제(국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였음. 그리고 지역경제는 불균형 성장논리에 따라 일단 국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면, 그 후 성장한 국민경제의 경제력으로 낙후된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원함

- 2국 3중 경제

-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의 재벌그룹은 국내에 거점을 두고 있지만 자본도 다 국적 자본이고 생산을 비롯해 경제활동을 세계무대에서 하기 때문에 재벌 그룹의 성장은 한국경제의 성장과 함께 가지 않음
- 재벌 등 초국적 자본은 세계를 무대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국내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국제경쟁을 앞세워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음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대, 농산물 가격 하락 등)
- 따라서 국민경제는 거의 의미가 없어지고, 국내 경제는 세계를 무대로 하는 세계경제와 지역민의 삶을 기초로 한 지역경제로 분화됨. 그리고 세계경제와 지역경제는 대립 갈등 관계를 가지면서 공존

□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 세계화 이후 지역경제의 불안정이 증대되고 지역의 불균형발전이 심화되고 있음
 - 지역경제는 세계시장에 통합되면 될수록 불안정성은 증대하고, 지역경제의 흥망성쇠가 초국적 자본의 움직임에 의해 좌우됨
 - 세계화, 특히 금융세계화는 고도의 기업서비스 활동과 정보통신시설이 집중된 이른바 세계도시를 필요로 하고, 세계도시는 세계경제의 지역적 네트워크로 존재하고, 세계경제의 지역적 네트워크에 포함된 일부 지역은 성장하지만, 대다수의 지역은 배제되고 주변화 됨
- 세계화는 경쟁력이 약한 산업과 그러한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붕괴시킴. 즉, 농업과 중소기업의 몰락은 농촌과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로 진행되게 됨
- 신자유주의는 삶의 공간(생산과 재생산)으로써 지역을 위협하고 있음
 -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경쟁과 시장주의는 노동권의 불안(실업과 비정규직화), 대형 유통 자본에 의한 지역 상권의 잠식과 자영업자의 몰락, 농촌경제의 쇠퇴 등 지역경제를 위협함
 - 신자유주의는 주거, 보육, 교육, 보건의료, 환경, 문화 등에서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시장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음
- 신자유주의적 분권화가 지역의 난개발(환경파괴)과 재정위기를 가져옴
 -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지역이 위기에 처하지만 중앙정부는 재정위기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없게 되고, 신자유주의 분권화를 추진함. 즉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하도록 강요함
 -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분권화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재정력과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면서 무분별한 기업유치와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난

개발로 인한 지역 환경의 위기와 지방재정의 위기, 주민의 삶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삶(요구)에 기초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추구해야 함

-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농업이 발전해야 함
 - 충남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의 비중은 2008년에 전체 취업자의 19.5% 그리고 생산액의 7.2%를 차지하고 있음. 충남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의 비중은 지역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크지만, 서북부 지역과 계룡시 등 5개 시군을 제외하면 농림어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별첨 : 충남농업의 주요지표>
 -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의 비중(2007년 기준)은 아산시(0.8%), 천안시(1.6%), 계룡시(2.6%), 당진군(4.8%), 서산시(4.7%), 청양군(34.4%), 부여군(29.8%), 서천군(17.9%), 보령시(17.5%), 태안군(17.1%), 예산군(15.6%), 논산시(14.1%), 공주시(12.9%), 홍성군(10.9%), 금산군(9.35), 연기군(7.1%) 등
 - 서북부 지역의 천안시, 서산시, 당진군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충남에서 낮은 편이지만, 충남 농업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매우 중요함. 천안시는 농가인구 수와 밭 면적에서 충남에서 제일이고, 서산시는 경지면적이 제일 많고, 당진군은 농가가구 수 1위, 농가인구 수에서 2위, 경지면적 2위(논면적 1위)를 점하고 있음
 - 농업에 기초한 6차 산업의 발전에 충남 지역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음
 - 충남의 16개 시군 가운데 천안시와 아산시 등 서북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농업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임
 - 이러한 농업생산(1차산업)을 기초로, 농식품 관련 2, 3차 산업이 성립함. 따라서 농업의 쇠퇴는 곧 지역 경제의 쇠퇴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민의 삶의 터전인 농촌이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됨
- 충남 농업 농촌의 발전은 농민 뿐 아니라 충남 도민과 국민 모두에게 필요함
- 국민의 먹을거리 기본권(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국내 농업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
 -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글로벌 위기(경제위기, 자원위기, 환경위기의 융

- 합)가 심각해지고 있음
- 특히 지구규모의 심각한 식량문제 및 고조되고 있는 미래 식량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 국민의 삶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이 지니는 가치(다원적 기능)를 증진하지 않으면 안 됨
 - 농업과 농촌은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식량안보, 지역경제의 유지, 국토 및 환경의 보전, 인간교육, 전통 및 문화의 계승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은 무역을 통해서만 제공될 수 없는 이른바 농업의 비교역적 역할(Non-Trade Concerns)로서 국제통상협상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 선진국의 예를 보면, 사회가 발전할수록 농업 농촌의 가치는 증대함

2. 정부는 그동안 농업·농촌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다고 하는데, 왜 농업과 농촌은 발전하지 못하였는가?

□ 그 동안의 수많은 정부의 농촌대책(농정개혁과 투융자 계획)은 농정 불신만을 낳았음

- 정부는 1980년 대 이후 수많은 농촌대책을 수립
 - 문민정부의 42조원(1992-8년), 국민의 정부의 45조원(1999-2004년), 참여정부의 119조(2004-13년)의 투융자 계획. MB 정부는?
 - 수차례에 걸친 농정개혁 및 농협개혁 방안
- 그러나 농민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농정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
 - 농민들은 ‘농업·농촌에 대한 투융자가 부족하다’, ‘농업·농촌은 희망이 없다’
 - 국민들은 ‘농업·농촌 부문에 대한 투자는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농특세까지 부담하며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달라진 것이 뭐냐’

□ 첫번째 이유 : 전체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이 농업·농촌의 희생을 전제로 한 성장제일주의 정책이었고, 농정은 그로 인한 모순을 완화하거나 뒤치다꺼리 하는 역할을 담당

- 농정의 방향은 전체 국민경제의 요구, 즉 경제정책의 기조에 의해서 결정되었음

-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농정은 쌀 증산농정 : 외화절약과 저농산물가격 유지를 위한 수단
- 1980년대 말 이후 우리나라 농정은 농업구조농정 : 경제개방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구조 조정의 수단
- 농정은 성장제일주의, 수출 지상주의 경제정책의 하위 정책
 -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에 농업·농촌은 공업화·도시화를 위한 역할(희생)이 강조되었고 공업과 도시의 나머지 부분으로 인식
 - 1990년 대 이후 이른바 개방화·세계화 시대에는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음
 - 최근 DDA·FTA 논의 과정에서 농업·농촌은 또 다시 희생되어야 할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두번째 이유 : 정부는 농정 목표를 잘못 설정하였음

- 1990년대 이후 농정은 시장개방에 대응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농정의 기본이념(목표)으로 함
 - 특히 MB 정부는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업', '돈 버는 농업', '수출농업'의 육성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를 포함한 농업외부의 인력과 자본을 유치하여 대규모 농식품 유통회사 및 기업농을 중심으로 농업을 재편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네덜란드와 뉴질랜드의 수출농업을 우리 농업의 모델로 제시함
 - 그러나 이러한 비전은 농업·농촌의 존재가치와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요구, 농민들의 열망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정부의 역할을 잘못 설정하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고, 농업·농촌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임
 - 최근 발생한 구제역 대재앙은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화, 규모화, 과밀 사육의 직접적 결과임
- MB 농정의 문제점
 - * 문제점 1 : 농업은 인간생명의 필수조건인 식량을 생산하는 생명산업이고 환경적으로 탄소 중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녹색산업임. 그리고 농촌은 농업생산의 주체인 농민이 삶을 영위하는 농업생산의 공간이면서 국민들의 휴양 및 휴식 공간임
 - 따라서 농업·농촌의 존재 가치는 국제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할 수 없음
 - * 문제점 2 : 우리 국민들은 과연 농업이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어가고 또 수출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는가

- 농업생산은 GDP의 2.2%에 불과하고, 농산물 수출액은 총 수출액의 0.7%에 불과함. 순전히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농업의 존재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농업생산과 수출을 늘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그것을 위해 국민들이 농업지원을 위해 세금을 내려고 하지는 않을 것임. 농업에 투자하는 돈으로 더 많은 생산과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

* 문제점 3 : 기업농으로 농업·농촌의 존재가치를 충족할 수 있는가

- 우리 농업구조는 여전히 영세소농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그들은 농업 생산의 커다란 부분을 담당(비율 : 예, 쌀과 한우)하고 농촌의 환경과 국토를 지키는 정원사 역할을 하고 있음. 만약 소수의 기업농이 농업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소농들의 이농이 가속화된다면 농촌사회의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임
- 우리나라 농가의 약 2/3는 1ha 미만의 영세농이고, 전체 농가의 90%가 영세농임. 또한 농가의 42%가 겸업농(제1종 12.6%, 제2종 29.4%)임. 따라서 이들을 제외한 어떠한 농정도 성공할 수 없음
- 세계최대의 농업국인 미국에서도 전체 농장수의 90.5%(2007년 현재)가 연간 매출액 25만 불 이하의 소농이고, 이들이 미국 농업총생산액의 23.1%를 담당하고 있음. 특히 매출액 1만 달러 미만의 영세농도 전체 농장수의 59.8%를 차지하고 있고 그 비율은 1982년 42.5%에 비해 증가추세임. 소농은 경영주의 65세 이상 비율이 32-37%이고, 농업소득은 적사이지만 정부의 직불금과 농외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 문제점 4 :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특정 농업 집단을 지원하는 것은 성공할 수도 없고, 시장 질서를 왜곡할 뿐임

- 정부는 우리나라 농업구조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은 정부의 구조개선정책의 성과라고 하지만, 농업구조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정부 정책의 효과는 미미함. 오히려 농업구조개선에 투자된 막대한 재정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구조개선, 기업농과 수출농을 육성하기 보다는 시장경쟁에서 낙후된 다수의 농민들이 시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정부는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사용하였음

• 그동안의 농정은 중앙집권적 설계주의 농정이었음

- 정부는 농업투융자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육성해야 할 전업농의 호수를 업종별로 정하고, 개발해야 할 농촌마을의 개수를 정하고, 중앙정부가 기획부터 집

행까지 총괄해 왔음

- 이러한 중앙집권적 설계주의 농정에서는 지역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획일적 농정이 되기 쉽고, 지방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함
- 중앙차원에서 해당 시책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면 특정 사업에 대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가 낮아져 농정이 불안정해짐

• 중앙집권적 설계주의 농정은 관료주의와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됨

- 설계주의 농정은 공무원들이 개발독재 시대의 경제계획의 성과를 과신하고 그것을 농정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1-2개의 제철공장을 설립하는 것과 수백만의 농민을 상대로 하는 정책은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함
- 수많은 농정대책은 한국농업·장기적 비전과 계획에 의한 농정이란기보다는 그때그때의 심각한 농촌문제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거나 집권당의 농촌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농민 길들이기 혹은 환심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음
- 집권당이 정치적으로 생색을 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농정을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안 됨
- 생색을 내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사업은 하드웨어성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 되고, 소프트웨어성 사업은 지극히 미미해야 함

• 농정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매우 적음

- 2010년 충남의 농림수산 사업비 1조 536억 원의 구성을 보면, 국비 48.9%, 도비 11.8%, 시군비 22.1%, 융자 5.5%, 자부담 11.7%로 되어 있음
- 그런데 국비 사업비에는 도비, 시군비,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하면, 충남 농림수산사업비의 72%가 국비 사업에 들어감
- 특히, 도비 사업비는 1,240억 원 가운데 609억 원(49.1%)이 국비에 매칭되고, 606억 원(48.8%)이 시군비와 매칭되고, 도 자체 사업비는 25억 원(2.1%)에 지나지 않음

3. 중앙정부는 우리나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농업 농촌의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재정립

• 농정 비전을 국제경쟁력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사회'로 전환

- 칼 폴라니 : 자본주의 시장메커니즘은 상품이 될 수 없는 '토지, 노동, 화폐'를 상품화한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 토지의 산물인 농산물은 시장경쟁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물임. 그러한 생산물에 대해 국내시장도 아니고 세계시장을 상대로 한 경쟁을 전제해서 수립되는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음
- 개방 체제 하에서 농산물의 무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제경쟁력이 농정 이념이 될 수는 없음. 국제경쟁력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사회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음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사회’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 농업인(농촌주민)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
-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
- 순환과 공생의 도농 공동체 만들기

□ 농정의 대상을 농업(인)에서 농업, 식료, 농촌지역으로 확대

- 농정을 부문 정책에서 농업·지역·환경을 포괄하는 통합적 농촌정책(integrated rural policy)으로 전환해야 함.
 - ‘농업=농촌’ 혹은 ‘농업생산성의 향상=농업발전=농촌발전’이라는 등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음
 - 과거의 농정은 농업부문 근대화 혹은 농촌공업부문 육성 혹은 농촌생활환경 개선 등 부문 정책이었지, 농촌이라는 지역에 기초한 통합적 농촌정책은 거의 추진되지 않았음
 - 오늘날 농정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업정책이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일반 국민과 소비자의 관점에서 식품의 안전성과 영양공급, 환경보전과 농촌지역의 진흥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농업정책, 농촌정책, 식품정책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해야 함
 -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2월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하여 식료를 농정의 수비 범위에 포함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농정의 중심은 농업정책이고 그 중심 이념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이고, 농업·농촌·식품정책 사이의 연계성은 약함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은 농촌경제의 기반임. 또한 농업관련 전후방 산업 및 서비스업은 농촌경제의 기간산업이며, 다양한 직불제는 농가경영의 안정과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조건불리지역, 환경보전 등)에 기여함. 농촌개발 전략이 외생적 개발에서 내발적 발전으로 전환하면서 농업과 농촌개발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음
 -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라고 하듯이 식품정책과 농업정책 사이에는 매우 높은 보완관계를 지니고 있음.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식량자급률(칼로리 자급률 포함)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국내

- 의 농업 생산기반이 필요함.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의 농업 생산을 친환경적으로 개편하고 안전한 국산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함.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조직화를 통해 생산과 소비를 직접 연결하는 지역순환 농식품체계(local food system)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 관련 산업(가공 및 유통)은 농촌사회의 주요한 경제적 기반이고, 특히 농촌지역에 뿌리를 둔 농식품 산업의 발달은 농촌사회 활력의 기초가 됨

□ 농정의 추진체계 개편

• 농정 각 주체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함

- 시장과 정부의 역할 : 농업은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시장원리에 맡기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국가에 의한 국경보호와 국내보조가 필요한 산업임. 특히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은 시장에서는 달성될 수 없고, 농업·농촌의 상대적 낙후는 시장 실패의 결과이기 때문에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농정으로서는 농업·농촌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음
- 그렇다고 정부가 농업부문에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따라서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의 문제이고, 이는 농정 각 주체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문제임

• 농민의 주체성을 확립해야 함

- 농업의 주인(주체)은 말할 나위 없이 농민임. 농업·농촌문제는 농민과 농촌주민 스스로의 자각과 주체적 노력이 없는 한 문제 해결의 전망은 없음
- 농민은 농정의 시혜 대상이 아니라 농정의 주체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참여하여야 하고, 농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농정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각각 분명히 해야 함

-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농정의 일 주체인 농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와주는 것임
- 중앙정부는 한국 농업(농촌)의 장기적 비전하에서 농업·농촌의 활성화 조건을 마련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농민의 영농의욕을 고취(조장)할 수 있는 정책(가격 및 소득정책과 농촌생활여건정비)과 영농애로를 타개하는 정책(제도개혁, 생산기반 정비나 대형 기계 및 시설의 도입, 농업기술 개발 보급, 농민력 개발 및 교육), 그리고 농업관련 기초 서비스(통계, 농산물 등급화 검사, 시장 및 가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한편 농지 및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정책 등을 실시
- 그렇지만 이러한 역할을 중앙정부가 모두 직접 수행할 필요는 없음. 농가소득과 관련된 가격 및 소득정책이나 여건(제도) 정비 기초 서비스 등은 중앙정부가 직접 담당하지만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는 커다란 방향 및 틀

만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계획이나 집행은 지방정부에 맡겨야 함

- 농업·농촌의 발전에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함
 - 농업생산은 본래 강한 지역성을 띠 수 밖에 없고 일정한 지역을 범위로 이루어지며, 각 지역은 자연적 조건, 역사적 전통, 사회경제적 조건이 매우 다름
 - 한 나라의 농업은 이러한 개성이 풍부한 지역농업의 종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은 지역 농업의 발전을 통해서 실현됨
 - 지자체는 농업생산 측면 뿐 아니라 유통 및 판매, 가공, 소비 등 종합적 관점에서 지역농업계획을 수립해야 함
 - 이러한 지역농업계획은 지역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서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함
- 중앙집권적 획일적 농정체계를 지방분권적 자율적 농정체제로 전환해야 함
 - 지방분권적 농정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관과 민의 역할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를 재조정하고 그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강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함
 - 사무이양에는 반드시 재정 이양이 뒤따라야 함. 국제 일부의 지방세 이전, 지방채의 자주적 발행 권한 부여 등 지방의 자주세원을 확대하고, 국가보조금은 점차 줄여가되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함. 다만,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교부세(수직적 및 수평적)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함

4. 충남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충남농정을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가?

□ 충남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자

- 농업·농촌의 비전
 - 민선 4기의 농업·농촌의 비전 : ‘세계시장과 경쟁 가능한 강한 농수산업’, ‘살고 싶고 찾고 싶은 풍요로운 농촌’
 - 민선 5기의 농업·농촌의 비전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사회
- 농정 목표
 - 민선 4기 :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가치 중심의 고품질 농식품산

업’, ‘살고 싶고 풍요로운 농촌’, ‘앞서가는 스마트 지방농정’

- 민선 5기 : ‘충남 농민(농촌주민)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 ‘충남 도민과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의 보장’, ‘순환과 공생의 충남 도농 공동체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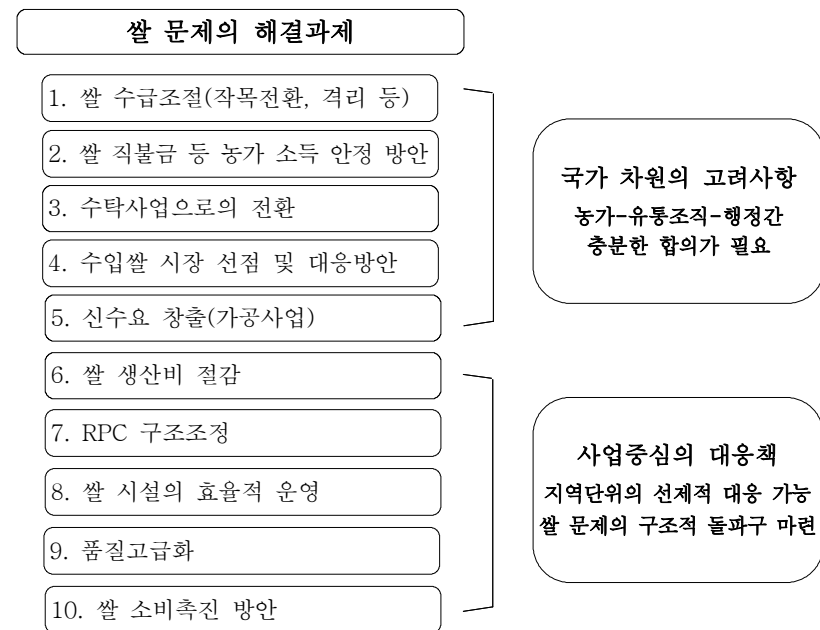
• 가치 및 핵심 전략

- 분권과 자치 : 농정 추진체계의 혁신
- 주체 역량 : 농촌 지역리더 양성
- 협동과 연대 : 지역사회의 연대 조직화
- 순환과 공생 : 대안적 사회경제시스템의 구축

□ 충남도의 역할을 재정립 하자 : 지방분권과 협치(거버넌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 충남도가 해야 할,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여 집중
- 쌀 정책의 사례(충남도의 역할) : 친환경 고품질 유도, 생산비 절감 및 충남 쌀 마케팅, 시설의 효율적 이용 등



• 중앙농정의 지역화

- 충남도의 농업·농촌관련 사업의 대부분이 국비사업인 현실을 감안할 때, 최대

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국비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집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중앙정부의 부처별로 유사한 사업이 중복 혹은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지방정부(도와 시군)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의 농정 관련 부서들의 협력, 기능별 통합과 조정이 필요
- 국비 보조 사업에는 반드시 도비와 시군비 그리고 농민의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국비 사업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즉 국비 사업을 많이 따오는 것 많이 능사가 아님
- 중앙정부 사업을 지역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개선방안과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함

• 충청권 광역 지자체 간의 협력 관계 구축

- 충남과 대전의 경우,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구축 뿐 아니라 환경과 자원의 공동관리,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 연계 사업의 추진 등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음
- 충남과 대전의 협력관계를 충북을 포함한 광역 충청권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 도와 시군의 역할 분담과 협력 : 도와 시군의 상생적 분권

- 도에 비해 시군의 예산이 훨씬 많을 뿐 아니라 실제로 도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는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에, 도의 비전과 정책 방향에 따라 가능한 한 기초자치단체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예산지원)와 감독기능(인사권과 감독권)을 적절히 사용해야 함
- 동시에 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군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능이라는 인식 전환과 도와 시군 사이에 상생의 지방분권이 필요함. 따라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과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도는 시군과 협력하여 기초지자체의 사업별 혁신 모델 혹은 행정 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민관 협력 체계의 구축

- 지역금융기관(농협), 상공회의소, 대학, 민간기업,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소비자단체와 농민단체) 등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농정에 도입
- 충청남도 농수산혁신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농민 단체를 비롯해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
- 특히 농협과의 협력을 강화함. 예를 들어 농협과 협력하여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 농협중앙회 충남본부에서 2000년부터 '지역농업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계기로 광역·기초 수준에서 경제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체계 구축 : 농협의 지역사회 공헌·사업 유도

5. 충남 농정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 충남 농정의 기본 과제

- 삶터(생활공간), 일터(경제활동 공간), 쉼터(경관 및 환경 공간)로써 농촌을 발전시키고, 이를 담당할 농촌 지역리더를 육성하는 것

1. 삶터: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농촌 서비스 기준 도입 및 시행

• 중앙정부는 2010년 농촌서비스 기준제도 도입

- 국민 최소한 수준(National minimum)의 관점에서 농촌 주민이 도시민과 함께 최소한의 시민권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생활여건을 마련하는 것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개정하여 농촌 서비스 기준의 제정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여 공표(2010.7.23). 2011년 1월24일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시행령' 개정
- 농촌 서비스 기준 : 농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public services) 항목과 수준.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의 8개 분야 31개 항목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시 농촌 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포함.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 시 농촌 서비스 기준 달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규정. 기본계획 뿐 아니라 시행계획과 시도계획 그리고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문화
-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 대안 마련
- 수범사례 발굴.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 서비스 공급방안이나 전달체계 제시
- 기초생활권 계획과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과 연계

• 농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충남도의 정책과제

- 충남의 기초생활권 시군의 공공서비스 수준은 전국 평균에 비해 대체로 낮을 뿐 아니라 16개 시군별로 격차가 매우 큼. 따라서 농촌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다른 시도에 비해 충남은 더욱 절실한 실정임<별첨 : 충남 공공서비스 공급지수>
- 삶의 질 향상 시도 계획에 농촌서비스 기준을 반영하여 성과목표 및 지표 재설정
- 농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의 주기적 점검과 컨설팅 체계 구축 : 시군별 이행실태 점검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파트너십 구성 : 삶의 질 향상위원회 ; 공공부문, 기업부문, 제3섹터, 주민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등 지역 주요 주체들 간 파트너십 형

성. 예, 영국의 LSPs(Local Strategic Partnerships)

- 농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사회적 기업의 육성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목적 : 지속 가능한 도농 공동체 만들기
 - 지역 만들기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생태적)으로 통합적인 발전을 추구함. 경제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기초에 지나지 않음. 경제적 개발이라는 하나의 관심만으로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지역의 파괴나 쇠퇴를 가져옴
 - 생태계의 보전과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지향하는 장으로서 지역을 재생하는 것이 지역 만들기의 기본목표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원리 : 순환과 공생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인간과 인간의 공생,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생의 원리는 순환의 원리에 의해 뒷받침됨
 - 첫째, 순환과 공생의 지역 경제 : 지역경제의 순환과 자립, 생산과 소비의 순환(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생), 도시와 농촌의 순환(공생)
 - 둘째, 순환과 공생의 지역 사회 : 인간 간의 공생(협동과 연대), 지역자치
 - 셋째, 순환과 공생의 생태계 : 생태계의 순환, 지역자원의 순환과 환경재생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실천과제
 - **자립적 지역 경제의 실현** : 로컬 푸드/지역농업조직화/재래시장 활성화/지역특화산업 육성/지역통화/도농교류/농업 6차 산업화/사회적 경제 확대
 - **분권과 자치의 지역공동체** : 지역복지 공동체/지역교육 공동체/지역문화 공동체/여성·보육 공동체/주민 참여, 주민자치, 공동 학습 활동
 - **생태계의 보전** : 지역 자연 순환형 농업/에너지 자립형 마을/리사이클링(폐기물 재활용, 순환형 지역사회 실현)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충남도의 과제
 - 충남형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개념 정립
 - 기존 마을(지역) 만들기 관련 사업의 실태조사 및 평가
 - 지역 만들기 역량 조사 및 충남형 지역 만들기 모델 개발 연구
 - 지역 만들기 전담 지원 조직 구성
 - 지역(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의 단계적 추진

2. 일터 : 경제활동의 다각화(농업의 발전과 6차산업화)

□ 친환경 농업의 발전

- 친환경·유기농업을 충남 농정의 기본 토대로 설정하고, 농업관련 예산을 친환경·유기농업 중심으로 조정 확대
 - 2020년까지 친환경 농업(면적 기준)을 15%로 확대 : 충남 친환경농업관련예산 2010년에 667억 원. 전남은 2014년까지 45% 목표로 연간 3,324억 원 투융자
- 친환경농업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육성
 - 친환경농업직불제 확대/충남친환경농민단체 육성 지원
- 지역 순환형 농업생산
 - 축산분뇨의 자원화/경축복합농업/에너지 자립

□ 로컬푸드 :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구축

-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 기본계획 수립
 - 지역농식품정책협의회 구성
 - 충남 농식품부문 실태조사
 - 도민 여론 수렴, 공청회,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한 여건 조성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
- 친환경 무상급식과 공공급식의 확대
 -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 광역 및 기초(물류 센터가 아닌 정책 센터)
 - 공공 급식 실태 조사
-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 구축 활동 지원
 - 농민장터 운영
 - 도시농업활성화
 - 식생활교육
 - 도농교류
 - 지역농식품 홍보 등

□ 6차 산업화

- 6차 산업의 개념 : 1차 산업(생산) * 2차 산업(가공) * 3차 산업(서비스, 유통 및 판매) 혹은 (1차+2차+3차 산업) 형태의 융복합
 - 충남의 농가소득의 구성(2009년)을 보면 농외소득이 42.9%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농촌은 이미 농업생산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음
- 친환경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 활성화 지원
 -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 직거래 자금 지원 확대 및 소비지 판매장 사업 지원
 - 친환경 농산물 식품가공 산업 육성 : 지역특화품목을 중심으로 한 광역 친환경 가공공장/시군 지역단위의 다품목 소규모 가공센터
- 지역특화품목의 6차 산업화를 통한 지역산업의 발전 지원
- 지역순환 농식품체계의 구축
 - 지역생산 농산물의 가공/직거래/도농교류
→ 6차 산업의 안정적 수요 기반
- 도농교류의 확대
 - 충남 도농교류 지원 센터 설립 :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포함
 - 도농교류 관련 기관 통합/정책수립/교육 및 홍보/도농교류 인력 양성/농산어촌 체험마을 주민교육 및 재교육/귀농귀촌지원
- 지역자원의 활용 산업화 : 고유가, 화석연료로부터 자립 및 소득원 창출
 - 풍력, 태양에너지, 지열, 바이오매스(축산분뇨, 잡목, 농업생산 부산물, 폐식용유 등)를 활용한 지역 에너지 생산(자립)
 - 2014년 이후의 화력 발전세(약 167억원)의 절반 정도를 지역 에너지 생산을 장려하는 발전 차액금으로 지원하는 방안
- 6차 산업 플래너 육성 : 충남발전연구원의 충남농업6차산업화센터(구 농업테크노파크)의 역할 제고

3. 쉼터 : 농촌 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회복

□ 농촌은 단순한 생산 공간이 아니라 레저와 휴식(휴양) 공간

-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개발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

- 농촌다움(rurality)의 보전 : 농촌지역의 도시 따라잡기식 개발 지양(예, 아파트 건설)

□ 농촌 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회복 지원

- 자연환경 보전
- 야생동식물 보호
- 유형·무형의 전통적 문화유산(전통 건축물, 문학 및 예술, 축제, 식문화 등)/지역의 개성
- 환경 및 경관 보전 직불제의 활용
 - 환경 및 경관의 보전은 농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관광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기여
- 농촌경관계획 수립

□ 농촌지역의 농업자원(농지, 물, 토양 등)의 보전

4. 주체 형성 : 농촌 혁신 리더 양성

□ 충남도 지역리더 육성 계획 수립

- 부문별 지역리더 육성 연차 계획 수립
 - 지역개발부문/협동조합부문/친환경농업부문 등
 - 충남도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과 비용을 분담하고, 시군은 교육 참가자를 선발하고 관리
- 지역리더 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충남도가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주도할 지역리더의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은 외부 민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 지역 주민들의 상호 학습을 조장하기 위한 지원

□ 충남도 지역리더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현행 농촌리더 교육의 문제점

-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많은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민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주민들은 유사 중복 교육의 이수로 인해 일종의 교육 피로증에 시달리고 있음
- 교육수료자와 사업대상자의 연계가 이루어지 지지 않아 교육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 통합적인 지역리더 관리 시스템의 구축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수료자와 사업대상자 선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역리더 관리 시스템이 필요
 - 역량 강화 교육 이수자 풀(POOL) 구축

□ 액션 러닝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

- 주체 역량강화의 두 가지 방법 : 교육·훈련과 실천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
 - 교육프로그램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파일럿(pilot) 사업을 통해 주민의 사업계획 역량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행정과 주민 사이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함. 예, EU의 LEADER 프로그램, 진안군의 Green Village 사업, 옥천군 향수30리 아카데미 프로젝트반 등
 - 충남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군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집행과정을 감독·자문하고 사후 추진결과를 도에 보고함

□ 외부 인재 수혈

- 귀농 귀촌의 활성화
 - 지역리더의 상당수는 도시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귀농·귀촌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임
- 개방형 공무원(계약직) 제도의 도입
 - 민간기업 또는 대학교 등 민간 부문의 우수한 인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전문분야의 공공 행정을 담당하도록 함
 -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의 ‘계약직 공무원’은 총 3,087명(광역지자체 1,458명, 기초지자체 1,631명)인데 이는 2002년의 1,163명에 비해 5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임
 - 모범적인 사례는 전북 진안군의 마을 만들기 팀, 전북 완주군의 ‘지역경제순환센터’ 등

□ 핵심 농업인 육성

6. 맺음말 : 과연 되겠는가, 누가 할 거냐?

□ 과연 충남의 농업·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거냐?

- 우리 자신에게 달렸음
 -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는 주체적 결단이 필요
 - 다만,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우리 농업과 농촌은 당장 망하지도 그렇다고 당장 좋아지지도 않음
 - 그렇지만 시대는 농업·농촌 편입 : 글로벌 식량위기·기상이변으로 인한 국내식량생산의 중요성,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증대 등으로 국내 농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쾌적한 삶터·일터·쉼터로써 농촌의 가치도 증대하고 있음

□ 누가 할 것인가?

- 농촌에는 늙은이 밖에 없고 사람이 없다는 말은 틀렸음
 - 2005년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2005년 현재 우리나라 농촌에는 총인구의 18.5%인 876만 명이 살고 있고, 농가인구만 해도 340만 명에 달함. 2005년 현재 충남의 농가인구는 44만 6천명임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농민 인구 비율은 35%인 것에 비해 일본은 62%임. 농업대국인 미국의 경우도 소농 경영주의 65세 이상 비율이 32-37%임
 - 농촌에서 60대는 장년층임.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60세 전후였기 때문에 40대가 장년층이었지만,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기 때문에 60대가 장년층임
 - 농사는 원래 나이 먹고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적합한 직업임
- 농촌인구의 절대수가 아니라 ‘활기 있는 농촌 주민’의 수가 중요
 -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지만, 농촌생활이 지니는 우위성(안전, 건강, 쾌적함, 연대 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활기 있는 농촌주민’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고 이들이 농촌의 주인이 될 것임
 - 최근 연간 1만 명 정도가 귀농·귀촌을 하고 있고, 충남은 그 점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한 조건(임지 및 자연 여건 등)을 갖추고 있음
 - 또한 농촌의 어메니티와 먹을거리 자급을 추구하여 농촌을 찾는 도시민도 크게 증가할 것임

□ 농업·농촌의 발전은 농민 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응원

- 일본의 2010년 ‘신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 : 농정의 기본방침으로 '국민 전체가

농업·농촌을 지탱하는 사회의 창조'를 표방하고 예산 지원

- 국민 참여 확대방안으로는 ① 농업·농촌가치 및 역할 홍보, ② 식료자급률 향상을 위한 식생활운동, ③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활동
-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국민운동 : 'FOOD ACTION NIPPON'과 '아침밥 먹기 캠페인'
- 도농활성화를 위한 국민운동 : 'all right 일본'과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 프로젝트'
- 충청남도농민회에서는 전 도민적 차원에서 농업·농촌을 응원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 함
- 어릴 적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들이기 위한 식생활 교육 : 중앙정부 차원의 운동에 적극 참여
- 학교 텃밭 프로젝트 : 농업·먹을거리의 가치 체험 교육과 정책 홍보(미국 미셸 오바마의 백악관 텃밭 활용 사례 등)
- 도시텃밭 프로젝트

<부록: 충남 농정의 비전, 목표, 가치 전략 그리고 추진 과제>

비전	농어업인·소비자·도시민이 통해 상생·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사회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농어업인(농촌주민)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 • 충남 도민과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과 공생의 충남 도농 공동체 만들기 				
핵심가치	분권과 자치	주체 역량	협동과 연대	순환과 공생	
핵심전략	농정추진체계의 혁신	농촌지역리더 양성	지역사회 연대 조직화	대안적 사회시스템 구축	
주요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혁신위원회 • 중앙농정의 지역화 • 농정분권 • 도/시군의 상생분권 • 민관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 지역리더 육성계획 수립 • 지역리더 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적 지역경제 실현 - 지역공동체 - 환경 및 경관 보전 - 에너지 자립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농 중심의 지역농업조직화 • 생산자/소비자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직거래, 공동체 지원 농업 - 도농교류센터 설립 • 도 차원 농업 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보험 - 영세농고령농 생활안정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농업 및 생산자(단체) 육성 •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 구축 • 지역순환형 농업 확립 • 사회적 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형 사회적 기업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기업, 협동조합, 생협 등 육성 • 농어업 6차산업화 	

<별첨 1: 충남농업의 주요지표>

지표명		지표	시도 순위	기준 시점	비 고
10a당 쌀 생산량		568kg	2	'09. 12.	전국평균 534kg
벼 재배면적		160,952ha	2	'09. 12.	전국의 17.5%점유
벼 경지면적		238천ha	3	'09. 12.	전국의 13.8%점유
경지정리율		92.2%	1	'09. 12.	전국평균 90%
경지면적대비 농업진흥구역비율		72.1%	1	'09. 12.	전국평균 58.7%
농어가 인구		454,455명	3	'08. 12.	전국의 13.4%점유
농수산물수출액		413,000천불	3	'09. 12.	
가 축	한 우	344천두	3	'09. 12.	전국의 13.1%점유
	젖 소	84천두	2	'09. 12.	전국의 18.8%점유
	돼 지	1,786천두	2	'09. 12.	전국의 18.6%점유
	닭	26,439천두	2	'09. 12.	전국의 19.1%점유
축산물작업장		154개소	-	'09. 12.	
치어방류		8,382만 마리	-	'09. 12.	
친환경농산물생산량		187.8천 톤	5	'09. 12.	전국 2,209천톤
친환경농산물생산비율		8.5%	-	'09. 12.	전국평균 12%
밤 생 산 량		28,141톤	1	'09. 12.	전국 75,171톤
생표고생산량		10,364톤	1	'09. 12.	전국 25,242톤
건표고생산량		438톤	2	'09. 12.	전국 2,032톤
은행 생산량		474톤	1	'09. 12.	전국 1,160톤
호두 생산량		199톤	3	'09. 12.	전국 979톤
농어촌진흥기금지원		222억		'09. 12.	

<별첨2: 충남의 공공서비스 공급 지수>

기초생활권 시·군의 공공서비스 부문별 공급지수: 2005년 기준

서비스 부문	기초생활권 시·군			충청남도		
	군	도농통합시	일반시	군	도농복합시	16개 시·군
주거	4.388	5.461	6.195	<u>4.558</u>	5.296	4.881
교통	4.750	5.024	6.243	5.086	5.069	5.078
교육	4.895	4.730	5.932	4.852	<u>4.718</u>	<u>4.793</u>
보건의료	4.769	5.073	5.660	5.059	5.122	5.087
사회복지	4.620	4.841	6.668	<u>4.655</u>	<u>4.756</u>	4.699
응급	4.672	4.822	6.525	4.850	4.811	<u>4.833</u>
문화여가	4.952	5.009	5.148	4.877	4.874	4.876
정보통신	4.510	5.063	6.592	<u>4.618</u>	5.102	4.829
종합지수	4.695	5.003	6.120	4.819	4.969	4.885

주 : 전체 시·군의 평균 서비스공급지수 값은 5.000임

충청남도 16개 시·군의 공공서비스 부문별 공급지수: 2005년 기준

시·군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	종합지수
천안시	5.914	5.287	4.739	5.379	5.031	5.110	5.035	5.470	5.246
공주시	5.067	4.702	4.740	5.408	4.717	4.645	5.183	4.792	4.907
보령시	5.101	4.927	4.777	5.103	4.630	4.912	5.018	4.683	4.894
아산시	5.169	4.431	4.630	4.998	4.883	4.822	4.598	5.047	4.822
<u>서산시</u>	<u>4.955</u>	<u>4.136</u>	<u>4.621</u>	<u>4.759</u>	<u>4.628</u>	<u>4.813</u>	<u>4.601</u>	<u>4.855</u>	<u>4.671</u>
논산시	4.621	5.438	4.851	5.530	4.824	4.895	5.016	4.787	4.995
계룡시	6.244	6.565	4.669	4.675	4.579	4.480	4.671	6.078	5.245
금산군	4.333	5.425	4.833	5.023	4.619	4.696	4.827	4.525	4.785
연기군	4.935	5.110	4.760	4.860	4.851	4.766	4.641	4.976	4.862
부여군	4.521	4.945	4.912	5.340	4.650	4.755	4.618	4.429	4.771
서천군	4.100	5.129	5.016	5.524	4.806	5.101	5.039	4.596	4.914
청양군	4.032	4.895	4.973	5.003	4.553	4.958	4.812	4.436	4.708
홍성군	4.849	5.169	4.911	5.348	4.718	4.914	5.350	4.715	4.997
예산군	4.848	5.083	4.784	4.803	4.565	4.954	4.699	4.763	4.812
태안군	4.799	4.734	4.726	4.766	4.536	4.759	4.850	4.462	4.704
당진군	4.608	5.282	4.750	4.867	4.600	4.748	5.056	4.658	4.821

분과토의

「농어업·농어촌 혁신」 대토론회

「농어업·농어촌 혁신」 대토론회

1. 분과토의 자료집 설명
2. 「농어업·농어촌 혁신」 시행계획 수립 로드맵
3. 분과별 토의자료
 - 가. 제1분과 : 친환경농업 및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 구축
 - 나. 제2분과 : 지속가능한 내발적 농어촌 발전
 - 다. 제3분과 : 주요 6대 품목 발전방향
 - 라. 제4분과 : 농정 거버넌스 발전방향

1. 분과토의 자료집 설명

- 본 분과토의 자료집은 민선 5기 충남농정 혁신을 위한 17개 분야별 기본방향과 실천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임
- 자료집 작성에 참조한 계획 및 자료는 아래와 같음
 - 충남 농정 연속 워크숍 주제발표, 토론자료(제1회~제6회)
 - 민선 5기 충남 비전
 - 2011년 농수산국 업무계획
 - 2020 충남 농어업·농어촌 발전계획
 - 충청남도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5개년 기본계획
 - 충남 농수산 분야 연구보고서 : 충남발전연구원 기획과제(2010. 12)
 - 충남 농정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 : CDI 세미나(2010-41)
 - DDA/ FTA 대응 종합대책 최종보고회(4월 11일) 자료
- 분과토의 자료집에 제시된 계획 및 사업은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계획(사업) 또는 향후 정책과제로 제안된 것임
 - ※ 계속사업 및 既예산사업 제외
- 각 분과에서는 자료집을 토대로 민선 5기내 실현가능성(예산확보), 정책적 수요도,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주제별 실천과제를 선정
 - ※ 기본적으로 충남도 농수산국 가용예산(자체예산)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 선정
- 분과토의에서 도출된 실천과제는 추후 정책수혜자, 담당공무원, 전문가와 함께 정책화(사업화)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사업)에 대해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 2011년 8월말까지 수립

2 「농어업·농어촌 혁신」 시행계획 수립 로드맵

단계	내 용	담당	시 기
1단계	▶민선 5기 충남 농정 핵심주제 및 추진방향 설정 - 4대 부문 17개 분야, 단계별·체계적 추진 ▶농어민 단체장과의 간담회 : 공감대 형성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혁신위원회	1월~2월
2단계	▶충남 농정 전문가 합동 워크숍 실시 - 분야별 기본방향 및 실천과제 모색 (6회, 17개 분야)	충남도+충발연	2월~4월
3단계	▶워크숍 결과 및 기존 계획·정책 검토 - 분야별 기존 계획 및 정책 검토 ※ 신규계획, 예산 미편성 사업, 정책과제 - 워크숍 결과 요약 - 대토론회 분과토의 자료 작성	"	3월~4월
4단계	▶「충남 농어업·농어촌 혁신」 대토론회 실시 - 관련 주제간 논의와 합의를 통해 분야별 기본방향 설정 및 실천과제(핵심과제) 도출	"	4. 26
5단계	▶도출된 실천과제 검토 및 최종 선정 - 실현가능성, 타당성, 정책적 수요도, 소요예산 등 검토 - 사업 우선순위 결정	"	5월
6단계	▶최종 선정된 실천과제(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 사업목적, 내용, 소요예산, 기대효과, 연차별 투자계획 등	충남도+충발연 +농업인(단체)	6월~8월

제 1 분과

친환경 농업 및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 구축

- I.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구축
- II.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대책
- III. 친환경농업 발전 방안

1.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산업형 농업모델을 지향하고 있는 세계 농식품체계로의 편입으로 인한 문제
 - 산업형 단작농업으로 인한 농민들의 통제력 저하
 - 식품산업의 독점적 지배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과 건강의 위협
 - 먹거리의 공공성 약화
 - 저가 수입농산물의 범람과 장거리 푸드마일로 인한 문제
- 수도권 집중적인 유통구조로 인한 문제
 - 중앙집중적 유통구조로 인한 지역시장의 사실상의 부재
 - 복잡하고 길어진 유통단계로 인한 생산자·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 낮은 직거래 비율
 - 대량유통에 참여하기 어려운 가족 영세소농의 판로 문제
- 농식품 생산·유통·가공·판매·소비 간 지역연계의 부재로 인한 문제
 - 농민주도 부가가치 창출의 부진
 - 부가가치의 지역외 유출 심화
 - 지역 내 주체간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협력 부재

2. 논의 된 기본방향

- 농업 투입자재의 생산에서 농업생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全过程의 지역 기반화
- 생산자와 소비자의 재연결 내지는 협력을 통한 관계 회복
 - 지역사회 내의 신뢰에 기반한 관계
- 소농의 소득 창출
- 지역 내 자기의존도 증가 : 지역식량자급률 제고
-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 궁극적으로는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순환 농식품체계의 구축

3. 논의 된 신규 사업 및 과제

1) 로컬푸드 포럼 및 심포지엄 개최(▶ 워크숍)

- ▶ 목적 : 충남도 차원에서 '지역'(로컬)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조율할 필요성
 - 농식품체계 내의 다양한 주체들 간에 '지역'과 '로컬푸드'에 관한 상호토론과 논의의 장을 마련함. 특히 생산 분야 주체들 뿐만 아니라 유통 및 외식분야의 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성
 - 충남도내 지역상황(대도시 지역, 도농복합시, 농촌지역)에 맞는 '로컬푸드'의 규정과 모델을 정립함
 - 광역과 기초단위 지역간에 상충적이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개념을 정립함
 - 유통에만 초점을 맞춘 협소한 로컬푸드 개념이 아니라 생산·유통·소비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로컬푸드 개념을 정립함
- ▶ 방안 :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함 (추진위원회, 포럼, 토론회, 간담회, 공청회 등)

2) 로컬푸드 시범 사업 추진(▶ 충남농정방향 간담회)

- ▶ 목적 : 지역내 생산자·가공/유통자·구매자 간 지역연계 강화를 위한 중간 지원체계 및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순환 농식품체계의 구축을 도모함
- ▶ 방안
 - 로컬푸드 지원센터 설치 :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중간 지원기구(관련 주체 대상 정보제공 및 논의의 장 마련)
 - 농민 주도적 6차 산업화 지원 : 농가가공 활성화 지원, 농가맛집 활성화
 - 직거래 지역유통 활성화 : 농민장터, CSA(꾸러미사업), 공공급식
 - 도시농업, 텃밭활동, 도농교류 활성화

3) '지역순환 농식품경제' 기본계획 수립(▶ 충남농정방향 간담회)

- ▶ 목적 : 지역순환 농식품경제 실현을 위한 청사진인 기본계획을 수립함
 - ▶ 방안
 - 지역순환 농식품 정책위원회 구성 : 농식품체계의 다양한 주체들의 민주적 참여와 논의,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 논의를 진행
 - 충남 농식품부문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기초연구 용역 수행
 - 지역순환 농식품경제 충남도 조례 제정
- ※ 추진사례 : 영국 웨일즈 지방정부, 런던시, 런던시 캄튼구, 일본 지산지소 추진계획,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베네토주, 미국 일리노이주, 뉴욕주,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시정부 등

II.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대책

1. 현황 및 문제점

- 먹거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함
- 먹거리 위기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주체별, 계층별 인식 차이가 매우 심함
- 먹거리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사회적 경향성의 문제가 존재함
- ⇒ 따라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공공적인 가치를 지니는 공공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그에 따라 식재료 공급업체의 사익추구 문제와 이에 대한 공적 통제의 부재상황이 발생함
- 학교급식에 양질의 지역산 식재료가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있지 못함
 - 저가 저품질의 수입산, 출처불명의 식재료들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임
- 학교급식 관련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생산자·소비자·유통/공급자·지역사회·지자체 간에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2. 논의 된 기본방향

- 학교급식이 지역순환 농식품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어야 함
- 정부와 지자체가 급식영역에 대해 정책적인 계획과 개입에 나서야 함
- 학교급식을 매개로 학생의 먹거리 보장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안적 보건복지를 실천해야 함
- 학교급식 영역에서의 문제제기를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장하여 새로운 정책이슈를 발굴해야 함

3. 논의 된 신규 사업 및 과제

1)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재개정(▶ 워크숍)

- ▶ 목적 : 현재 지역개념이 취약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재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지역적 논의의 틀과 지역산 식재료 사용근거를 확보함
- ▶ 방안 :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한 재검토 및 개정방안 모색
(지원대상 농식품에 대한 재규정)

2) 광역 및 기초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워크숍)

- ▶ 목적 : 지역 학교급식 관련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급식의 개혁을 지원하고 식재료 공급을 통제할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광역 및 기초단위로 설치함으로써, 충남지역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함
- ▶ 방안
 - 센터 설치 추진단 구성 : 센터 개념에 대한 합의 및 향후 로드맵 구상
 - 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시행
 - 센터 시범사업 시행

3) 충남 공공급식에 대한 실태조사(▶ 워크숍)

- ▶ 목적 : 학교급식 이외에 다양한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공공급식과 급식식재료 공급체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현재 존재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을 강구함
- 초·중고 학교급식 이외에 유치원/어린이집, 대학의 급식, 공공기관 급식, 사회복지시설 급식, 군대 급식 등 다양한 영역 존재
 - 학교급식과 유사한 식재료 공급의 문제점 존재
-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영역이 선도적으로 제도적 구매를 주도할 필요성
- 친환경 무상급식 의제를 넘어서 새로운 의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는 효과
- ⇒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 방안 : 공공급식 영역별 급식 수요량, 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가격, 위생상태, 인력배치 등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 시행

4) 시설급식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

- ▶ 목적 : 학교급식 만큼이나 규모나 파급효과가 큰 (사회복지)시설급식의 조달체계 및 조달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거둌
- 시설급식은 학교급식과는 달리 지자체 일원체계를 갖고 있어서 정책집행이 훨씬 용이함(영유아 보육시설, 노인/ 장애인/ 아동 사회복지시설, 재가급식)
- 지자체에 의한 평가 및 지원체계에 급식의 질 항목을 강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산 식재료(로컬푸드) 사용을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향후 설립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안고 있는 방학기간 유희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임
- ▶ 방안
 - 충남도에 시설급식 개선 추진단 구성 : 전문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도 공무원 참여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 검토 및 보완책 강구
 - 시설급식 실태조사 실시 : 시설급식의 식재료 소요량 및 식재료 조달체계/방식의 실태 파악
 - 시설급식 품질기준 마련 : 급식 품질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통해 시설의 관행 변화 추동
 - 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결합 방안 모색

III. 친환경농업 발전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이 계속 커져가고 있음

- 전지구적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 자원고갈 속에서 기존의 산업형 농업방식에 대한 반성의 심화와 고품질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급증
-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
- 전국 친환경농산물 비중 10% 돌파, 시장규모 24배 증가('00년 → '10년)

○ 충남 친환경농업 현황

- 유기, 저농약 인증 면적 및 생산량은 전국평균 상회
- 무농약 인증은 전국평균 하회
- 한국 유기농업의 산증인인 아산과 홍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2개 지역 제외하면 매우 취약함 : 2개 지역 역시 행정의 지원결과 보다는 민간의 자발적 노력 결과임

○ 충남 친환경농업 정책의 문제

- 2차에 걸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추진하고 있는 전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적 의지와 지원이 부족했음
- 그동안 친환경농업 육성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웠음 : '20 계획에서도 세부과제 정도로 취급됨

2. 논의 된 기본방향

-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와 중장기 전략 수립 : 충남 친환경농업 거버넌스 확립
- 친환경농업 선도주체의 육성 : 광역적 조직화 모색
- 유통 확대를 전제한 생산의 확대 : 역내외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확대
- 친환경 6차산업화 전략 : 친환경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
- 충남 친환경농산물 신뢰 제고 : 안전성 관리, 로컬푸드 활성화, 도농교류 지원 등
- 종합적인 농업 환경정책의 수립 및 평가지표 개발

3. 논의 된 신규 사업 및 과제

1) 도시지역 학교급식 공급 확대(▶워크숍)

▶목 적 :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시행 상황에서 단일 창구를 통한 충남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수도권 및 대도시 시장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채널을 확보함

▶방 안

-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또는 충남 친환경급식사업단)를 통하여 충남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 부여
- 도내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체계적 공급
- 생산계획 및 관리에서부터 유통, 마케팅, 시장조사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대도시 구매처에 신뢰 부여
- 이를 위하여 농협, 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참여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필요

2) 충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실천계획 확정(▶워크숍, 도 계획)

▶목 적 : 현재 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실천 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하고, 계획의 실천가능성을 보장함

▶방 안

- 전남 생명식품산업육성 5개년계획(1차, 2차)의 세밀한 벤치마킹
 - 전남에서 실행한 세부시행사업들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벤치마킹 타당성 검토
- 간담회 및 공청회를 통한 현장의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3) 친환경농업 조직 및 리더 육성(▶워크숍, 도 계획)

▶목 적 : 친환경농업인의 조직화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당면과제를 해결 하는 주체로 육성하고, 민관거버넌스 체계의 파트너로 확립함

▶방 안

- 잠재력을 갖고 있는 농가(저농약인증, 선도농가, 창업농, 귀농자 등)를 신규 인증농가로 육성
- 연구회 및 시군생산자단체의 활동지원
- 광역적인 조직화 지원을 통한 전반적인 관리체계 확립과 광역유통에 대응

4) 친환경 축산 및 수산, 6차산업화 육성(▶워크숍, 도 계획)

▶목 적 :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친환경 축산과 수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농업의 전후방연계 강화를 통한 6차산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농식품 분야의 지평을 확장함

▶방 안

- 구제역 사태 대응책으로서 친환경 유기축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식품산업 관련 주체들(가공, 유통, 판매)과의 연계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
- 친환경농업인의 유통 및 가공참여 지원지원을 통한 친환경 농식품 공급 사슬의 강화

제 2 분과

지속가능한 내발적 농어촌 발전

- I. 농촌 지역리더 양성
- II. 도농상생·교류(귀농·귀촌 활성화 대책)
- III.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 IV. 농어촌 서비스 기준
- V. 향토산업 발전방향

Ⅰ. 농촌 지역리더 양성

1. 현황 및 문제점

- 주민주도에 의한 주민참여형 농어촌지역 개발 역량 미흡
 - 주민참여형 농어촌지역 개발 및 마을 운영에 필요한 역량 부족
 - 마을사무장 등 지역개발 인력이 육성되었으나, 양적·질적 수준 미약
- 농촌지역 인적역량강화 교육 실적 저조
 - 충남의 경우 농촌지역 인적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및 리더십 육성 과정 참가율 전국대비 상대적 저조
- 농촌지역개발 주체간의 거버넌스 형성 부족
 - 주민, 공무원, 사회단체, 농협 등에 대한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
- 충청남도 독자적 농촌 지역리더 육성 교육프로그램 부재

2. 논의 된 기본방향

- 시스템적인 농촌지역리더 육성
 - 개인적인 리더가 아니라 각 주체가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개발을 추구해 갈 수 있는 리더 육성
- 지역주민외 행정기관, 농협 관련자의 리더육성 프로그램 구축
- 농촌지역의 내발적발전을 위한 자치와 분권의 실현주체 육성
-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수용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에 중점

3. 논의 된 신규 사업 및 과제

1) 충남도 지역리더 육성계획 수립(▶워크숍, 민선 5기 충남비전)

- ▶ 계획기간 : 2011 ~ 2014년
- ▶ 육성인원 : 1,000명(250명 × 4년)
 - 지역개발부문 400명, 협동조합부문 300명, 친환경농업조직화부문 300명
- ▶ 재원부담 : 충남도/ 시군/ 협동조합 분담

2) 충남도 통합적 지역리더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워크숍)

- ▶ 목 적
 - 학점제를 통한 지역역량가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 교육 일원화를 통해 교육대상자원의 중복수강을 방지함으로써 예산절감과 교육생확보의 어려움을 해소
 - 교육과 정책사업의 연계를 통해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사업추진의 성공가능성을 높임
- ▶ 사업개요
 - 시장·군수실 산하에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협의기구(외부 전문가 포함)를 신설
 - 주민교육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실행부서는 기획감사실에 설치하고,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장단기 년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협의기구'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
 - 각 프로그램의 이수인원을 DB화하여, 프로그램시행 시에 중복수강을 방지하고, 단계별 프로그램 이수를 권장함으로써 유사중복과정 이수를 방지하고, 예산과 교육참여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 실행부서에서는 정책사업 시행시에는 반드시 교육이수 결과를 참고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사업과 관련된 적절한 교육이수자에 한해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 ▶ 기대효과
 - 지역리더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 행정력과 예산의 절감
 - 교육참가자들의 중복 수강으로 교육거부감 해소
 -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

3) 역량강화 교육이수자 풀(Pool) 구축(▶ 삶의 질 향상 계획)

- ▶ 필요성 및 목적 : 지역의 역량을 갖춘 인력의 D/B구축을 통하여 마을의 사무장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 도모
- ▶ 사업내용 : 교육이수한 마을리더, 사무장 및 추진위원장 등 D/B 구축
- ▶ 사업개요
 - 사업량 : 60명
 - 사업비 : 비예산사업
 - 사업기간 : 2010 ~ 2014년

4) 충남도 독자적 사무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위드스 맨스기 충남발전)

- ▶ 실천학습 프로그램 도입
 - 리더십 함양교육, 자기정체성 교육, 지역자원 찾기, 분야별 전문지식 등 실제 지역역량 강화로 귀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지역개발 컨설팅 기관 인증제 도입(▶ 삶의 질 향상 계획)

- ▶ 필요성 및 목적 : 농촌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 홍보, 마케팅, 주민교육 등 지역에 맞는 부문에 전문기관을 인증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
- ▶ 사업내용 :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참여기관을 인증
- ▶ 사업개요
 - 사업량 : 10개 인증업체
 - 사업비 : 비예산사업
 - 사업기간 : 2010 ~ 2014년

II. 도농상생·교류(귀농·귀촌 활성화 대책)

1. 현황 및 문제점

- 귀농인구(가구) 지속적 증가 추세
 - '05년 이후 뚜렷한 증가 추세, '05년 기준 최근 4년간 약 3배 증가
- 수도권의 도시민, 충남 농촌지역에 대한 선호도 높음
 - '06년 수도권 도시민의 충남 면지역으로의 이주 비율 전국 2위(14.7%)
 - 충남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자의 전출지 분포 : 경기>대전>서울>인천 順
- 다양한 형태의 귀농·귀촌 유형 등장
 - 농업을 목적으로 귀농하는 전업귀농형 비율 낮아지고 있음
 - 반면 농촌생활·전원생활에 대한 동경과 도시생활에 대한 피로 때문에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향 증가
 - 은퇴 귀농형, 노후 휴양형 증가 추세
- 충남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 부재
- 현재 운용 중인 기초자치체의 귀농·귀촌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책 마련 시급
- 충남도 귀농·귀촌 관련 통계자료 구축 및 관련 정보수집 매우 미흡

2. 논의 된 기본방향

- 충청남도 차원의 독자적 귀농·귀촌지원 체계 구축
- 다양한 형태의 귀농·귀촌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도시민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발굴
- 귀농·귀촌자들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 다양한 관련 정책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기구 설치
- 귀농·귀촌 관련 사업 가운데 현장에서 추진하는 업무에는 지역 사회의 민간 사회단체의 참여 필요(예, 진안군 귀농·귀촌 활성화 센터, 서천군 귀농인협의회, 남원시 도시민 유치 협의회)

3. 논의 된 신규 사업 및 과제

1) 충청남도 귀농·귀촌 수요예측 및 관련통계 정비(▶워크숍)

▶추진방향

- 수요에 맞게 예산을 준비하여 효율적 정책 실행을 위한 기초 작업
- 기초지자체별 귀농·귀촌 관련 통계 시급히 정비

2) 시·군 차원의 귀농·귀촌 지원센터 조성(▶워크숍)

- ▶추진방향 : 재정적 부담, 수요, 인력 부족 등을 고려 현 시점에서는 2~3개 기초자치단체를 연계(통합)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조성

3) 충청남도 귀농·귀촌 활성화센터 설립 및 운영(▶민선5기 충남비전)

▶추진방향

- 기초지자체의 귀농·귀촌지원센터와 연계
- 귀농·귀촌 관련 현황과 정보를 구축, 관리 수요자에게 종합적인 정보 제공
- 충남 귀농·귀촌활성화센터(가칭) 설립

【참고 : 충남 귀농·귀촌도움센터(가칭)의 설립·운영(예시)】

도입 시설	주요 기능 및 역할
귀농·귀촌 지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 단계별 상담 : 귀농 전문상담요원 배치 • 시·군별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제정 지원 • 농촌형 사회적일자리 창출 • 예비 귀농인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
귀농·귀촌 교육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유형별 귀농 교육 실시 • 귀농세미나 개최 • 영농 교육 실습장 운영 • 영농컨설팅 및 상담
귀농·귀촌 정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정보 제공 : 빈집 정보, 지역 소식, 귀농홍보물 제작 • 시·군별 귀농 정보지 제작 지원 • 충남 귀농 종합 정보 홈페이지 구축 및 사이트 유지 관리 • 정기적 귀농인 실태 조사 : 귀농자 DB 구축 • 잠재적 귀농인구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관리
귀농·귀촌 교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line을 활용한 소통의 공간, 귀농인 네트워크 구축 • 귀농자 간 동호회 또는 협의회 운영 지원

III.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1. 현황 및 문제점

○ 농촌개발 사업 추진체계의 개편 필요

- 최근 지방분권 및 지역의 자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포괄보조금 제도가 추진
- 그러나 사업의 대부분이 하드웨어 사업에 편중되고, 계획의 질이 낮고 주민참여가 저조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추진체계의 개편이 요구됨

○ 내발적 지역발전, 상향식 농촌개발이 주요 이슈로 등장

- 농정의 방향이 농업에서 농촌으로 확대
- 내발적 지역발전과 주민주도의 상향식 농촌개발이 중요 이슈로 대두됨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독자적인 농촌개발사업 및 마을만들기 추진

- 강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전남 행복마을조성사업, 전북 마을만들기, 진안군 마을만들기, 완주군 지역활성화 정책 등 지자체 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이 진행중

○ 주민중심의 마을만들기를 충남 민선5기의 주요 시책으로 제기

- 주민 중심의 마을조성, 희망 농어촌 만들기 등이 충청남도 민선5기의 주요 시책으로 제시
- 충청남도 농어촌마을 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새로운 모델 및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

○ 충남도에서 마을만들기 기획소위원회 운영중

- 충남형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임시조직으로서 정무부지사 및 관련 공무원, 대학교수 및 연구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획소위원회를 운영중

○ 충남형 '농어촌 마을 만들기'의 개념 정립 및 추진성과 미흡

- 충청남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만들기'의 목적, 범위, 추진주체 및 추진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

2. 논의 된 기본방향

- 마을만들기의 기본원칙은 ‘주민자치’의 실현
 - 행정의 역할은 사업주도가 아닌 여건조성 및 지원이고, 주민 스스로가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추진
- 기존 사업 추진체계의 개편 및 마을만들기 연계 추진
 -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기존의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의 추진 체계를 개편하고, 충남의 마을만들기와 연계 추진
- 소지역 경제 활성화, 친환경 로컬푸드 및 6차 산업화를 전제로 한 마을만들기
 - 농업, 체험서비스업, 수공업 등 저효율 산업육성이 마을만들기의 중요한 테마이며, 도시의 잉여 에너지를 농촌에 유치할 필요성이 있음
 -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가 마을만들기의 주요 목적이며 도농교류, 친환경 농업, 로컬푸드, 6차 산업화 등의 다양한 유형이 가능함
- 지역역량에 맞게 자율적이고 단계적인 사업 추진
 - 실제 주체는 농어촌 주민으로 마을단위에서 마을만들기 추진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통하여 다양한 유형, 단계별 사업, 자율적인 사업 추진
 - 지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추진하고 파급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
 - 마을만들기를 정형화시켜서 주민들의 역량 부족 등으로 거부감을 갖게 할 필요는 없음

3. 논의 된 신규 계획 또는 과제

1) 충남형 마을만들기의 명확한 개념 정립

- 충남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만들기가 어떤 마을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합의 형성 추진
- 충남형 마을만들기의 비전, 목표, 전략, 기본방향 및 기본원칙, 추진절차 등에 대한 개념 정립

2) 기존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의 실태 조사 및 평가

- ▶ 목적
 - 기존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의 추진 실태 조사·분석을 통한 농촌개발사업의 문제점 개선
 - 충남형 마을만들기와 기존 사업의 연계방안 고찰
- ▶ 사업개요
 - 포괄보조사업(일반농촌어촌개발사업) 등의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의 추진 실태 조사·분석
 -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 충남형 마을만들기 추진시 기존 사업과의 연계 추진방안 제시

3) 마을만들기 역량조사 및 충남형 마을만들기 모델개발 연구

- ▶ 목적
 -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농어촌 마을의 잠재역량 조사
 - 충남형 마을만들기의 추진 모델 개발
- ▶ 사업개요
 -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농어촌마을의 리더 및 주민역량, 잠재자원 등에 대한 실태 조사
 - 실태조사 및 기존 모델(국내·외 선진사례)의 심층연구를 통한 충남형 마을만들기의 모델 개발 연구
 - 충남형 마을만들기 모델 내용
 - 계획모형 또는 가이드라인(지침),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
 -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 조직 및 거버넌스, 정책 및 계획수립, 집행 및 관리, 법·제도 등

4) 마을만들기 전담·지원 조직 구성

- ▶ 목적 : 유기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 또는 지원조직의 구성
- ▶ 사업개요
 - 마을만들기를 종합·기획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담·지원조직 구성
 - 충남도 : 마을만들기 전담조직, 협력센터 구성
 - 시·군 : 마을만들기 전담팀, 지원센터 구성
 - ※ 협력 및 지원센터의 기능(안)
 - 마을만들기 지도자 및 주민 교육,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마을만들기 연구·조사, 마을 평가기준 작성
 -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홍보, 민간 네트워크 구축 운영
 - 기타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

5)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 ▶ 목적 :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만들기 활성화 기여
- ▶ 사업개요 :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 및 공포
 - ※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구성(안)
 - 마을만들기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관련 주체의 역할
 -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지원계획, 지원대상 사업, 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평가·포상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규정

6)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 ▶ 목적 : 마을만들기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하여 적용성 검토
- ▶ 사업개요
 -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충남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 농촌형, 도시근교형, 테마형 등 유형별 시범사업 추진

IV. 농어촌 서비스 기준

1.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촌은 지나치게 물리적 시설 설치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어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에 영향이 크지 않음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농어촌 개발정책의 목표와 방향은 유지하면서 공급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 방법 마련 필요
- 이에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최소한의 목표수준을 설정하여 정책적 투자 방안을 마련하여 성과 관리 추진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
 - 영국에서 도입·운영한 농촌 서비스 기준(rural services standard) 도입
 - 농어촌 서비스 기준 : 주거, 보건·의료 등 8개 분야 31개 항목
- 특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항목에서 필수적인 것을 위주로 하고 정책목표도 시설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2. 논의 된 기본방향

-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방향
 - 법적근거 마련 및 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과 추진체계 구축
 -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이행 촉진 방안
 - 이행 실태 점검·평가와 통계기반 구축 방안
 -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 관련 제도 및 정책과의 연계 운영 필요성

-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남 정책과제
 -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성과목표 및 지표 재설정
 -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의 주기적 점검과 컨설팅 체계 구축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파트너십 구성
 -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 수단 발굴
 - 농어촌지역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다양한 혁신방안 발굴
- 기타 논의된 기본방향
 -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익개념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수입에 대해 지적하면서 안정적인 정주시스템 제공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려 필요
 - 농어촌 서비스 기준 뿐만 아니라 서비스 입지 기준에 관한 필요 (집중형보다 분산형 인프라 구성, 개별형이 아닌 통합형, 행정단위 구분이 아닌 생활권역별 구분의 기준 필요)
 - 서비스 기준 마련시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기준

3. 논의 된 신규 사업 및 과제

1) 지자체 특성에 맞는 서비스 기준 설정(▶워크숍)

- ▶ 필요성 및 목적 : 지자체 특성 및 실정에 맞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 마련 필요
- ▶ 사업내용
 - 지자체별 농어촌 서비스 기반 서비스기반 실태 조사
 - 지자체별 농어촌 서비스 기준 마련

2)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워크숍)

- ▶ 필요성 및 목적 : 충청남도 각 시군의 공공서비스 공급실태와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발굴·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체계 필요
- ▶ 사업내용
 -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할 전문적 인력 및 기구(조직) 필요
 - 이행실태의 점검·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통계 기반 구축
 - 이행실태가 부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제 진단과 해결방안 제시 컨설팅

3) 파트너십 구성(▶워크숍)

- ▶ 필요성 및 목적 : 서비스기준 이행을 위한 위원회, 협의회, 파트너십등을 조직하여 각 지역에 적합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함
- ▶ 사업내용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기업부문, 제3섹터, 주민·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등 주체간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방안 마련
 - ※ 영국의 LSPs(Local Strategic Partnerships)

4) 정책 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수단 발굴(▶워크숍)

- ▶ 필요성 및 목적 :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기에 정책의 이행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 강구 필요
- ▶ 사업방향
 -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 협약 구축
 -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 이해 촉진을 위한 관련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보급
 - 이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 달성도가 가장 낮으면서 삶의 질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서비스 부문을 선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달성 한다는 협약하에 충남이 시군에 별도의 인센티브 지원

V. 향토산업 발전방향

1. 현황 및 문제점

- 향토산업에 대한 기초조사 미흡 및 비체계적 육성
 - 향토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향토산업의 선정기준이 시장성과 파급성에 기반하지 않음
- 향토산업을 가내수공업 단계에서 6차 산업화로 고도화 미흡
 - 관련정책의 개별적 추진으로 향토산업 육성이 단편적으로 추진
 - 가내수공업 단계에서 6차 산업화로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 미추진
- 향토산업과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부족
 - 향토산업과 지역산업과의 전후방 연계성 부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 미흡
 - 향토산업이 실질적인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함
- 향토산업 관련정책의 단편적 추진으로 통합적 육성 곤란
 - 농식품부, 지경부 등의 유사관련 정책의 단편적 추진
 - 개별 사업간·지역간 연계화 전략 미흡 및 사업성과 극대화 곤란
- 공공주도 및 R&D 부문 치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미흡
 -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 주도로 지역경제에 대한 낮은 파급성
 - R&D 부문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지역내 신규 향토산업 창출 저조

2. 논의 된 기본방향

-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 및 제도 마련
- 향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6차 산업화 도모
- 향토산업 관련정책의 통합화 및 개별 사업간 연계성 제고
- 향토산업과 지역산업의 전후방연계성 제고 및 관련사업의 연계화
- 민간주도의 사업추진과 향토산업 관련 창업 활성화 촉진

3. 논의 된 신규 사업 및 과제

1) 향토자원 및 향토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워크숍)

- ▶ 필요성 및 목적 : 향토산업의 기반인 향토자원에 대한 기초조사와 더불어 향토산업육성을 위한 기본전략을 수립함
- ▶ 사업개요
 - 향토자원의 발굴 및 DB화
 - 발굴된 향토자원의 시장성 분석
 - 향토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 ▶ 기대효과
 - 향토자원의 시장성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향토산업의 육성 토대 마련
 - 향토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체계적인 육성 기반 마련

2) 충남 6차 산업화센터의 활성화(▶ 워크숍)

- ▶ 필요성 및 목적 : 향토산업과 관련한 창업 촉진과 기업 애로사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의 설치
- ▶ 사업개요
 - 충남 6차산업화센터의 설립
 - 향토산업 관련 창업 및 마케팅 지원
 - 향토산업 관련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통합 지원
 - 향토산업의 지적재산권과 특허에 대한 자문(중기청의 지원프로그램 우선 적용)
- ▶ 기대효과
 - 향토산업과 관련한 창업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향토산업의 기업애로사항 지원과 지적재산권 자문으로 향토산업의 기업화 촉진

3) 향토산업육성조례 제정 및 향토산업통합위원회의 운영(▶ 워크숍)

- ▶ 필요성 및 목적 : 道 차원에서 향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 및 조직의 정비와 통합화
- ▶ 사업개요
 - 향토산업육성 조례의 제정
 - 향토산업 제도규제의 발굴·개선
 - 기존 향토산업 관련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道 차원에서 향토산업 통합위원회 운영
- ▶ 기대효과
 - 비체계적으로 운영되던 향토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
 - 향토산업 관련정책의 통합적 추진으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 및 파급성 제고

4) 향토산업 기반 확충 및 인증제 도입(▶ 워크숍)

- ▶ 필요성 및 목적 :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확충과 향토산업 인증제도의 도입
- ▶ 사업개요
 - 향토산업 전용단지 조성 및 농공단지의 전용단지화 추진
 - 향토산업 기업대상 및 인증제 도입 • 향토산업 육성기금의 설립 및 운영
- ▶ 기대효과
 - 비체계적으로 운영되던 향토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
 - 향토산업 관련정책의 통합적 추진으로 사업의 성공가능성 및 파급성 제고

5) 향토산업 공동학습 네트워크 및 교육훈련 강화(▶ 워크숍)

- ▶ 필요성 및 목적 : 향토산업 관련 주체의 상호학습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관련 인력의 체계적 양성
- ▶ 사업개요
 - 향토산업 네트워크 및 공동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역특화산업기획포럼사업 활용)
 - 향토산업 종사 인력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지역대학 및 고등학교에 향토산업 관련 학과 설치 유도
- ▶ 기대효과
 - 향토산업 관련분야 공동학습 네트워크 구축으로 혁신환경 조성 및 정보교류 활성화
 - 향토산업 관련 인력의 교육훈련과 신규 인력양성으로 안정적인 노동시장 확보

제 3 분과

주요 6 대 품목 발전방향

- I. 쌀 산 업 발 전 방 향
- II. 축 산 발 전 방 향
- III. 과 수 발 전 방 향
- IV. 원예(특작) 발 전 방 향
- V. 임 업 발 전 방 향
- VI. 어 업 발 전 방 향

I. 쌀 산 업 발 전 방 향

1.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 쌀생산에 전체농가의 59%(89천호, 전업기준), 농지의 70%(157천ha)가 참여하지만 농가당 평균 수입액은 10,157천원에 불과
 - 기계화율 91%, 수리안전답율 80%, 경지정리율 65% 등 기반은 양호
 - 그러나 고령화 심화, 영농후계자 부족 등 인적여건은 불리
 - * 65세이상 농업인 비중 : '05년) 30.2% → '08년) 34.2% → '09년) 35.3%
 - 농가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영농규모는 여전히 영세
 - * 농 가 수 : '00년) 152.8천호 → '05년) 136.2 → '09년) 126.2 → '10년) 151.5
 - * 호당재배면적 : '00년) 1.14ha → '05년) 1.22 → '09년) 1.28 → '10년) 1.46
 - 쌀 농가소득은 5,871천원으로 농가 전체소득(32,864천원)의 17.9%, 농업소득(10,038천원)의 58.5% 수준
 - * 농업소득율은 감소 추세 : '05년) 46.2% → '09년) 31.8%(△45.3%)
- 토질이 비옥하고 재해에 안전하여 고품질 생산에 유리하나 다수확 위주의 영농형태 유지
 - 대다수 농가에서 다수확 품종과 농법으로 농가소득 기대
 - 평년기준 쌀값은 전국 평균보다 5% 낮고, 수량은 3% 많아 결과적으로 소득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

2) 문제점

- 충남미 쌀가격이 하락추세로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신뢰확보 시급
 - 경기미 가격 대비 82.8% 수준(2011 1월 15일, 농업관측)
 - 전라미 약진 : 2010 전국 브랜드쌀 평가대회에서 12개중 10개 석권
- 주남벼 등 내비성 품종 비율이 높아 품질변이가 큼
 - 호품, 주남벼 재배면적('10) : 115,458ha(73%)

- 우리도 최다 재배품종 주남벼는 수량성이 높고 쓰러짐에 강하여 대부분 질소비료를 표준량보다 많이 사용
 - 밥맛 저하로 시장에서 인기가 없고 쌀값이 낮음
- 수량성이 낮은 고품질품종 재배 권장시 매입장려금 등 수량 저하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여 품종갱신에 어려움
 - 장기적인 안목에서 벼 보급종자를 갱신 공급하여 안정적인 쌀 수급은 물론, 쌀값 인상, 충남 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 품종수가 많아 품종별 구분저장이 어렵고 품종혼입 유통
 - 충남 주요 브랜드쌀 품종표기 적합율('10) : 75%
- 한반도 기후온난화 진행
 - 기후 변화에 의한 작물재배한계기 복상 및 품질·수량감소
 - 고온등숙시 유백미 발생증가로 품질저하 및 수량감소
 - 기상이변, 돌발병해충 대발생 및 각종재해 증가로 병해충 다발생
- 인지도 높은 명품 브랜드가 적으며 경기미에 비해 가격이 낮음
 - ⇒ 관행농법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원인은 다수확품종(73%) 재배 → 질소질 과다시비 → 단백질 함량 증가 → 밥맛 저하 → 가격하락 악순환

2. 논의 된 기본방향

- 쌀산업은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정립, 지방은 정책지원이 바람직
 - 국가차원 : 쌀수급 조절, 농가 소득안정 방안, 수탁사업 전환, 수입쌀 시장 선정 및 대응방안, 가공산업 등 신수요 창출에 중점
 - 지방차원 : 쌀생산비 절감, RPC 구조조정, 시설의 효율적 운영, 품질 고급화, 쌀소비 촉진에 중점
- “쌀산업”은 모두가 전문가, 고품질 품종선택 유도, 수매시 단백질 함량 검사 방안, 소비자가 인식하는 브랜드 육성대책 중점 추진
 - (환경측면) 타도 대량반출(생산량의 69%)로 가격경쟁 심화 중저가 유통
 - (지형측면) 자연재해 빈발, 다수확품종 선호 경향(소득보전 심리)
 - (수급측면) 생산연계로 쌀에 대한 애착 강함(생산량 조정정책 한계)

- 쌀산업을 큰 방향에서 보고, 관련주체간(생산자·정부·농협) 합의 필요
 - 생산비절감(단지화, 규모화, 계약재배), RPC문제(브랜드 관리방안), 품질문제(품종, 시비, 토양, 수확후 저장·관리)

3. 논의 된 신규 사업 및 과제

1) 쌀 등급표시제 시행관련 사전대비 필요

- ▶ 필요성 및 목적
 - 2011년산 쌀부터 '쌀등급표시제'를 시행계획이며, 2012년산 쌀부터는 고품질쌀 유도에 필수적인 단백질 함량을 포장대에 표시토록 의무화
 - (현행) 3등급 : 특·상·보통 → (변경) 5등급 : 1~5등
 - (현행) 단백질함량 표기 자율 → (변경) 단백질함량 표기 의무화
 - RPC, 소규모 도정공장의 보관시설을 확충하여 등급표시제 도입에 대비하고 RPC 자체수매시 단백질함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장비도입 유도
- ▶ 사업내용
 - RPC 건조보관시설을 확충하여 품종별, 등급별 별도보관 능력을 강화
 - 정부지원 RPC통합 및 시설현대화 사업비 활용
 - 소규모 도정공장에 대한 건조 보관시설 단계별 확충
 - 도내 쌀 유통량의 25%를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도정공장(588개)에 대하여 고품질쌀(1등급) 보관시설을 지원하여 별도수매 관리
 - 향후 RPC와 도정공장 자체수매시 쌀 품질측정 및 수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단백질 함량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조기에 도입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검사장비 확충
- ▶ 기대효과
 - 새로운 쌀 등급표시제 관리시스템을 조기에 정착하여 低價로 고착된 충남쌀값 상승의 기회로 활용
 - 정부수매와 RPC 자체수매시 단백질 함량에 의한 수매가를 책정하여 품종선택에 대한 논쟁을 근본적으로 종식하고, 농업인의 고품질쌀 생산 유도와 함께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2) 충남쌀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소규모 브랜드 정비

- ▶ 목적 : 쌀유통의 24%를 점유하며, 브랜드 수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 육성정책에서 소외된 군소 영세업체의 브랜드를 통합·정비하여 파워브랜드로 육성
- ▶ 사업개요
 - 민간주도 자율사업으로 시군별 양곡가공협회주관으로 2~3개로 통합유도
 - 품종재배방법 통일, 브랜드개발비 지원
 - 품질기준마련, 농업인 교육, 통합브랜드 개발
 - 군소 도정업체와 브랜드 공동사용 협약, 도정시설 현대화
- ▶ 기대효과
 - 군소 영세 브랜드의 시장·가격 교섭력 강화
 - 브랜드 개발과 병행, 지역별 재배기준을 마련하여 품질향상, 쌀값인상 등을 통한 농업인 소득안정에 기여

3) 생산비 절감 쌀 전문경영체 육성

- ▶ 목적 :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비, 쌀 품질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들녘단위 100ha이상의 면적으로 조직화·규모화 하여 쌀산업 구조개선
- ▶ 사업개요
 - 쌀생산을 주작목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등의 조직체에 생산비절감형 사업지원
 - 생산시설 : 자동화 공동육묘장, 자연녹화온실, 상온통풍 종자건조저장시설
 - 기계장비 : 공동직파기, 광역방제기, 개량용 배수물꼬 등 장비 신규구입
 - 컨설팅 : 품종·재배법 통일, 친환경기술 보급 등 교육훈련 경영진단 등
 -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들녘별 쌀전문경영체 육성계획을 수립, 계약재배 의무화
- ▶ 기대효과
 - 들녘단위 조직화를 통한 공동농작업 실현으로 생산비 절감 및 규모화 달성
 - 품종별 재배방법을 통일함으로써 고품질쌀 생산체제 확립
 - 고령농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지역 활성화에 기여

II. 축 산 발 전 방 향

1. 현황 및 여건

1) 현 황

○ '70년대 이후 국민 소득 증가와 더불어 축산물 소비량 급격 증가

- 1인당 육류소비량 : '80) 11.3kg → '90) 19.9kg → '09) 36.8kg
- 1인당 우유소비량 : '80) 10.8kg → '90) 43.8kg → '09) 62.3kg

○ 축산물 소비량 급격 증가에 따라 사육두수도 지속 증가

【축종별 사육두수('80 → '10, 충남)】

㉠ 한우 : 163천두 → 389천두, ㉡ 젓소 : 21,739두 → 79,064두
㉢ 돼지 : 233천두 → 1,897천두, ㉣ 닭 : 3,749천수 → 28,316천수

○ 소규모 복합영농 구조에서 전업화·규모화 빠르게 진전

【축종별 전업농 사육규모 비중('90 → '11, 충남)】

㉠ 한우 : 5.7% → 43.0%, ㉡ 젓소 : 11.8% → 83.5%
㉢ 돼지 : 22.4% → 89.3%, ㉣ 닭 : 15.6% → 82.7%

○ 생산액 증가로 축산업이 '농촌 주 소득산업'으로 성장

- '09년 농림업 생산액중 축산업 생산액이 38.4% 점유
 - 생산액('09년) : 농림업 43 조원, 축산업 16.5조원
- '08년 이후 생산액 기준 농림업 10대 주요품목중 6개 품목 축산물 차지

〈 10대 품목 〉 - ① 쌀 ② 돼지 ③ 한우 ④ 닭 ⑤ 우유
⑥ 계란 ⑦ 오리 ⑧ 건고추 ⑨ 인삼 ⑩ 감귤

○ 농업분야 농가평균 소득액중 축산업 소득액이 가장 높음

- 소득('09년) : 축산 48,762천원, 논벼 21,824, 과수 29,469, 화훼 38,021

○ 소비량이 증가하고 시장개방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축산물수입량이 증가하고 자급율은 하락

- 수입량('09년) : 쇠고기 198천톤, 돼지고기 210천톤, 닭고기 58천톤
- 자급율('09년) : 쇠고기 46.6%, 돼지고기 76.9%, 닭고기 85.6%

2) 여건변화

○ FTA/ DDA 등 시장보호 장벽이 무너지고 시장개방 가속화

- FTA 발 호(5개국) : 칠레, 싱가포르, ASEAN, EFTA, 인도
- FTA 협상타결(3개국) : 미국, EU, 페루
- FTA 협 상 중(7개국) :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 **먹거리 선택시** ⇨ 안전성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

- 고 급 육

- 한우 1등급이상 출현율 : '00년) 24.8% → '10년) 63.1%
- 우유 1등급이상 출현율(세균수) : '00년) 81.6% → '10년) 97.9%

- 안 전 성

- '89년 라면 우지 파동, '95년 고름우유 파동, '08년 멜라민 파동, '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촛불시위 등

○ 친환경에 반하는 가축사육방식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 확산

- 소규모 복합 영농에서는 비료로 활용되었던 가축분뇨가 대규모 전업 축산에서는 농촌환경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인식 됨
- 다두밀집 사육에 따른 악취, 파리 등 해충 증가 → 지역 민원의 근원

○ 2000년 구제역 발생 이후 악성 가축전염병 빈발 및 대규모화

- 구제역 발생 : 2000년, 2002년, 2010년, 2011년
- A I 발생 : 2003년, 2006년, 2008년, 2011년

2. 논의된 기본방향

○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업 육성

- 가축분뇨 자원화 및 농촌 환경개선
- 친환경안전축산물 생산·공급
- 동물복지관련 새로운 기준 설정
- 공장형 다두밀집사육 → 친환경사육 방식으로 전환

○ 축산업 경쟁력제고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자금 지원방식 개선
- 정확한 가축통계 조사 → 정책 수립시 활용
- 농가 사양관리, 교육 및 홍보 강화

○ 도축장 경쟁력제고 및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 도축장 경쟁력 제고 및 유통구조 개선
- 부분육 유통시스템 개선

○ 사전 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 방역시스템 보완 가축방역 전문 인력(기관) 확충

3. 논의된 신규사업 및 과제

1) 가축분뇨 자원화 및 농촌환경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축산이 규모화되면서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분뇨 발생량 年 7,258천톤)
- 축산농장 악취, 해충 증가로 농촌지역 민원 주원인으로 부상

▶ 개선방안

- 공동자원화시설 확대
- 분뇨 자원화 + 조사료 생산 전문 경영체 육성
- 일정규모 이상 농가 악취제거 및 해충퇴치시설 설치 의무화
- '깨끗한농장만들기 사업' 확대

2)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공급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 소득 향상으로 친환경 안전축산물 수요 점차 증가
- 광우병 등 안전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민감

▶ 개선방안

- 새로운 친환경 사양관리시스템(군사시스템) 도입(지원)
- '친환경축산물 직접직불제' 지원금액 및 기간 상향 조정
- 전업농 HACCP 인증 의무제 도입 : 인증요건 완화, 사후관리 철저

3) 동물복지관련 새로운 기준 설정

▶ 현황 및 문제점

- 소득 향상, 핵가족화 등으로 동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 변화
- 공장형 밀집사육방식, 비위생적인 동물유통 → 국민적 거부감 확산

▶ 개선방안

- 사육 면적, 사육환경 등 동물 복지에 적합한 새로운 기준 설정
- 재래시장 등에서의 동물 학대 및 불법 도축 단계별 금지 추진
- 생축 이송차량 등록제 단계별 추진 : '15년이후 의무화

4) 공장형 다두 밀집사육방식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높은 地價와 건축비로 최대한 '공장형다두밀집사육' 형태로 사육
- 축산업등록제 및 적정사육두수 기준 既 설정 → 실효성 미흡

▶ 개선방안

- 축산업 등록 대상 축종(면적) 확대
 - 現 축산업 등록대상 : 현재) 소규모 농장, 기타가축 제외
 - 변경) 소규모 농가 포함, 쉼 가금류·우제류 사육농가 등록
- 일정사육규모 이상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제' 도입
 - 허가조건 : 적정 사육두수, 소독시설·웬스 설치, 교육 이수 등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자금 지원방식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민선 출범 이후 정책자금 보조지원에 대한 축산농가 요구 급등
- 정책자금 지원시 소액 분산 지원 및 1회성 사업이 많음

▶ 개선방안

- 정책사업 지원 패러다임 혁신 : 사업 단순화, 1회성 사업·경상적 경비사업 지양
- 축산분야 사업계획 수립시 축종별단체 의견 적극 반영
- 정책자금 우선지원 대상 기준 설정 운영 : 정책 적극 동참 농가

6) 통계관리, 종축관련업체 관리 및 교육홍보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금번 구제역 발생시 통계와 실 가축 사육두수가 매우 상이
- 경영 등 종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축산관련 전문 교육기관 부족
- 국내산 축산물 및 브랜드에 대한 우수성·안전성 홍보 부족

▶ 개선방안

- ‘인구총조사’처럼 정확하고 세밀하게 가축통계 조사방법 개선
- 종축업(종계, 종돈)·부화업·AI센터 허가제 도입
- 교육기관 확대 및 교육(컨설팅)이수자 인센티브
- 지역 언론매체 등을 적극 활용 국내산 축산물·브랜드 홍보 강화

7)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도축장 경쟁력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농축협등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축산물 수급조절 기능 강화 필요
- 도축장 : 권역별 확보 필요성 대두, 종사자 위생·방역 의식 미흡
- 대도시에서만 설립이 가능한 ‘축산물 도매시장’ 설립 기준 보완

▶ 개선방안

- 지역 농축협 유통·판매 시설 확충 → 지속 지원
- 정부의 도축장 구조조정 한시적 연기 건의 및 도축장 위생·방역시스템 강화
- 축산군인 홍성군 ‘축산물 도매시장’ 건립이 가능토록 관련규정 개정

8) 부분육 유통시스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도축 후 일부는 도축장내 가공, 일부는 지육형태로 식육처리업체에 반출
- 일부 업체의 비위생적 지육처리로 인해 안전성 문제 발생
- 기존 도축장 내 부분육 처리 가공시설(포장처리업) 부족

▶ 개선방안

- 도축장 내 식육포장처리시설 설치 단계적 의무화
- 의무적용 제외물량은 지육특장차 이용 HACCP 적용 작업장에서 가공

9) 방역시스템 보완 및 가축방역인력(조직) 확충

▶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 이후 수많은 교육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제 교류와 국내 유통 다변화 등으로 악성 가축 전염병에 취약점 노출
- 특히, 금번 같이 전국 동시 다발적 발생시 대응 체계 차별화 미흡
- 가축 방역 전문인력 부족 및 방역 담당공무원 사기 저하

▶ 개선방안

- 구제역 예방접종시와 비접종시 메뉴얼 구분 수립
- 구제역, AI 등 악성전염병 검사권한 순차적 지방 이양
-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보고시스템 일원화 및 전산화
- 이동 통제 초소 장비 사전 확보·보관 → 초기 완벽한 차단 방역
- 現 구제역 예방 백신 전량 수입 → 국내 백신 생산시스템 구축
- 표준화된 농장·인체용 소독시설 설치 규정 수립
- 계절별 적합한 소독약품 및 EM균 등 개발 보급
- 사료, 집유, 분뇨, 가축수송 등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 도입
- 농장 출입구 및 주변 헨스 설치 의무화 → 사람, 동물 통제
- 동물 복지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살처분·매몰방식 개선
- 살처분 농가 보상금 지급기준 조정 : 보험제 도입,
- 축산관계자 입국시 검역 및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신고·소독의무화
- 보도시 국민 혐오감 주는 장면 자제 협조 요청
- 축산관련 조직 확충 및 시군 축산조직에 축산전문공무원 배치

III. 과 수 발 전 방 향

1. 현황 및 여건

- 충청남도 지역 과실의 경우 배를 제외한 사과, 복숭아, 포도의 특화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교통의 요지 이점을 활용한 유통센터 및 물류센터 기능 강화에 유리
- 대학, 연구소와 연계한 기술개발, 품종개발에 유리한 조건
- 충남의 과수산업 비중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
 - 도시개발 확대로 과수재배면적은 점점 줄어들 가능성 높음
 - 도시화로 인한 노동력 확보가 쉽지 않음
 - 신품종 개발, 가공제품 개발 등
 - 산지유통센터, 수출농산물 물류센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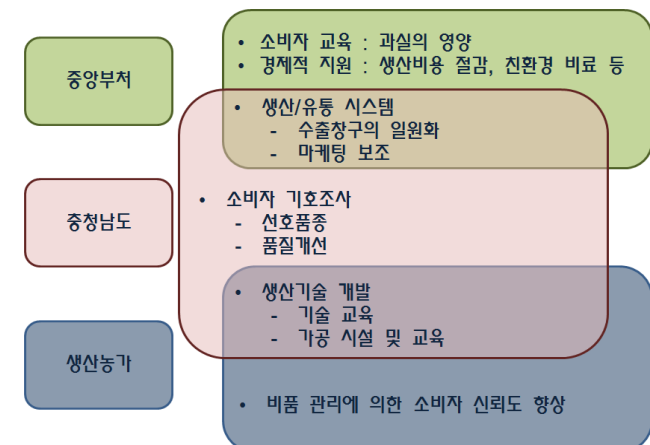
2. 논의 된 기본방향

☞ 충남이 추구해야할 기본 방향

- ◇ 연구개발 : 고품질 재배기술 강화, 공급과일 대비 대체 작물 개발
- ◇ 고품질 생산 : 지역여건에 적합한 기술개발, 전문인력의 교육
- ◇ 유통시스템의 선진화

- 소비자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품질, 상품 공급
 - 소비자 구입행태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설정
 - 품질경쟁력 제고
 - 고품질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보급
- 생산 및 상품화 과정 역할 분담, 전문성 강화
 - 산지출하단계에서 조직화, 전문화로 유통기능 강화
 - 산지출하 조직의 규모화 달성으로 거래교섭력 증진

- 과수농가 경영 안정성 증대
 - 과일 재배면적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지원은 신중한 역제가 바람직
 - 농가별, 과원별 맞춤형 생산 확대
 - 서리피해, 저온, 태풍 등 이상기온,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험가입 확대
 - 개방 확대에 대응한 경영체 체질 강화
- 가공산업 경쟁력 강화
 - 가공 상품 개발
 - 안전성 제고, 품질 균일성을 가진 가공제품 생산이 가능한 가공시설 확대
- 수출경쟁력 강화
 - 수출용 과일 생산을 위한 수출전문단지 운영
 -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활동은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추진
 - 지자체 수출 지원은 중앙정부 지원과 중복성 배제, 차별화
- 충남지역 과수산업 발전전략 차별화 부분
 - 대학, 연구소와 연계한 고품질 생산 품종, 기술개발로 차별성 강화
 - 고품질 생산을 위한 지자체 정책의 실현성 강화
 - 산지유통의 조직화와 규모화 달성을 위한 정책
 - 품목별 경쟁력 강화 전략, - 과수산업 관련 지원정책 수행



3. 논의 된 신규 사업 및 과제

1) 충남 과수 농산물 유통·가공 산업 센터(▶ 워크숍)

▶ 필요성 및 목적

- 충남의 모든 과수를 취합하여 시판, 가공함으로써 회전력 및 영업력 있는 연중 가공체계 센터 필요
- 선진국 유통·가공센터의 경우 품목 다양화로 연중 운영의 달성
- 농업인은 고품질 과일생산에 전념하고 유통센터에서는 책임지고 특품과 상품을 일괄 처리하는 유통체계 시스템 구축 및 이를 담당할 유통센터 필요
- 해외 수출량 확대 및 국내 다양한 거래처를 발굴하여 제값받고 판매하는 유통사업 실현 가능
- 효율적이고 현대화된 경영기법의 도입과 물류비용의 절감 기대
- 농산물 유통사업 개척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기여 가능

▶ 사업내용

- 농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농산물 취합, 가공, 시판
- 관광객 및 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먹거리 제공을 위해 견학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실험실습실 조성
- 유통 및 가공 센터 건립 • 유통체계 시스템 구축
- 소비자 선호도 분석을 통해 맞춤형 과일 공급 시스템 구축
 - 대포장에서 소포장, 대과종에서 중과종 등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신선한 과일을 공급 시스템 구축

2) 유통방식 다양화 및 유통 효율화(▶ 워크숍)

▶ 필요성 및 목적 : 유통방식의 다양화·선진화로 불합리한 유통비용 요인을 제거하여 유통의 효율화 추진

▶ 사업방향

- 유통방식 다양화 및 물류효율화 방안
 -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B2B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업체 및 외식업체 등의 직거래 확대 유도
 - 수요자별 요구품목·물량을 사전 예약, 확인된 수요량에 기초하여 공급자와 연결하는 생협 방식의 직거래 확산
 - 농업인이 주체가 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중심이 되는 Local-food 개념의 직거래장터 확충
- 과수 농가의 조직화·규모화를 촉진하여 농가 경영 안정화 달성
 - 농가의 조직화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조직력 강화, 상품의 균일 표준화, 체계적 마케팅 등 교육
- 거래방식의 선진화로 가격 변동폭 완화와 투명성 확보

3) '충남 브랜드' 개발로 통합적 마케팅(▶ 워크숍)

▶ 필요성 및 목적

- 상품품질의 고급성, 균일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브랜드화 필요
- 각 지역의 개별 브랜드가 아닌 도 단위의 '충남 브랜드'를 개발하여 수출 경쟁력 제고
-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철저한 등급화와 브랜드화로 승부

▶ 사업내용

- 충남 브랜드 개발, • 통합 브랜드로 광고, 홍보 등 마케팅 활동 방안
- 공동마케팅 방안, • 브랜드 관리를 위한 전담 전문인력 및 전문부서 설치
- 생산자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및 지도

4) 과수 소비 촉진을 위한 녹색식생활 확산(▶ 워크숍)

▶ 필요성 및 목적 : 과수 소비 촉진 및 미래세대의 건강한 올바른 식습관 문화 정착을 위해 녹색식생활 교육 전개

▶ 사업내용

- 교육기관·체험공간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식생활 교육기관 및 농어촌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우수 체험공간 조성
 - 초·중·고 교사, 영양사 등을 교육 전문인력으로 양성
 - 지자체 단위로 지역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구성, '지역 식생활 교육 기본 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유도
- 환경·건강·배려를 고려하는 다각적인 녹색 식생활 교육 실시
 - 가정식생활 수첩 보급, 공익광고 제작, 학술행사 등 지원
 - 초·중·고등학생 대상 연구학교·방과후 교실·농어촌 체험 등 지원
- 식생활 교육 국민 네트워크 등을 통한 민간 주도의 운동 확산
 - 지역 과수 소비 촉진, 민간단체·업체의 푸드마일리지 정보 제공 유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 전개
- 학교급식 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마련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우수 과수 직거래 및 공동구매 활성화 추진

5) 소비촉진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 필요성 및 목적

- 과수 체험, 식생활 교육 등 소비자가 함께 할 수 있는 농장 프로그램 운영, 과일 학교 무상공급 프로그램 개발로 소비촉진 전략으로 과수의 생산과 소비 차이 줄임
- 지리적 여건(관광지나 명소)을 이용한 과수분야의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소비 촉진

▶ 사업내용

- 구매형태 및 소비자 선호도에 맞는 소비자 만족도 제고 전략
- 판매 촉진 전략 개발
- 소비 촉진 프로그램 개발
- 체험관광 및 교육에 의한 소비시장의 확대 방안

6) 최저보장가격제도 구축(▶ 워크숍)

▶ 필요성 및 목적

- 농가의 소득 안정 및 생산 농가의 경쟁력 보장을 위해 최저 단가제 보장 체계 구축 필요
- 수급조정 및 최저가 가격 보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경쟁력 있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 가능

▶ 사업내용

- 과수분야에 최저보장가격제도 도입 : 과수분야 생산비를 보장
- 최저보장가격심의기구 설치 : 최저보장 가격기준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해 농민단체와 공무원, 지역조합으로 구성된 심의기구 설치
- 최저보장가격기금 설치 : 관내 농협 및 지자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금 설치

※ 최저보장가격제는 생산과잉 등으로 가격이 급락할 경우 미리 결정된 가격에 따라 신속히 시장에 개입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98년에 처음 도입 시행하고 있음. 현재 7개 노지채소를 대상으로 최저보장가격제도 실시하고 있음

Ⅳ. 원예(특작) 발 전 방 향

1.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 충남 원예작물 재배면적의 지속적인 감소
 - 충남의 원예작물 재배면적 비중(전국 대비)은 '09년 6.6%로 '00년 9.4%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임
- 원예작물 중 토마토가 가장 큰 생산 비중을 보임
 - 충남의 원예작물 중 토마토의 경우 '09년 전국대비 22.8%의 생산 비중을 차지하여 고추(8.5%), 마늘(8.3%), 양파(1.7%) 보다 높게 나타남

2) 문제점

- 토마토의 생산액은 증가추세이나, 가공품의 수입증가에 따른 피해 예상
 - 충남 토마토의 전국대비 생산비중은 22.79%로 전국1위를 점유하고 있는 특화작목이라 할 수 있으나, 수입의 대부분이 가공품으로 이의 증가에 따른 피해가 예상됨
- 고추의 생산량 변동 폭이 크고, 가격불안정 심화
 - 국내 고추생산량은 기상변화 등에 따라 생산량의 변동 폭이 크며, 전반적으로 수입 증가추세에 있어 국내 고추가격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음
- 마늘의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 심화
 - 10a당 마늘 생산비가 '05년 1,423천원에서 '10년 1,811천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쟁력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양파의 가격변동이 심하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추세
 - 양파 가격은 해마다 변동이 심한 편이며, 보통 2년 주기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화훼의 수출 증가와 함께 수입도 크게 증가추세
 - 장미, 백합, 난초를 중심으로 수출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난초, 백합은 주요한 수입 품목중 하나로서 대만산과 중국산 화훼의 수입이 크게 증가추세에 있음
- 인삼의 생산비 증가 및 인삼가격의 하락, 일부 국가 수출 감소 추세
 - 인삼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와 함께 생산비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인삼가격은 최근 하락하고 있고, 홍콩, 미국의 수출비중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음

2. 논의 된 기본방향

- 국가 차원보다 산지 차원의 경쟁력 강화
 -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린 경쟁력 있는 산지를 육성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지역 차원에서는 더더욱 중요함
- 가격, 품질, 마케팅을 포함한 종합적 경쟁력 제고 대책 추진
 - 실효성 있는 경쟁력 제고 효과는 생산비 절감과 가격으로 실현되는데, 이는 '생산시설 ⇒ 파종 및 수확 기계화, 시설내 장치화를 통한 노력 절감 ⇒ 수확후 운송, 저장, 선별 포장, 상품화'의 연계와 종합적 접근을 통해 극대화될 수 있음
- 가격경쟁력 제고
 - 사업파종→생육관리→수확→수확후 관리의 일관기계화와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산비 절감
 - 주아재배, 다수확 고품질 품종 개발보급 등 품종갱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 난지형 마늘의 농가 재배규모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성 제고
- 품질 및 마케팅 경쟁력 제고
 - 주산지 가공·유통 상품화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상품성 제고
 -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생산공급체계 구축
 - 파워브랜드화·GAP·원산지표기를 통한 철저한 상품차별화

3. 논의 된 신규 사업 및 과제

1) 고추의 가격경쟁력 제고 사업

- ▶ 목 적 : 고추의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 ▶ 사업개요
 - 주산지를 중심으로 다수확 품종을 개발 보급
 - 시설하우스 재배로 단수를 획기적으로 늘려 단위수량당 생산비 절감
 - 정식기 집중 보급으로 파종 노력비 절감

2) 고추종합처리장(RRPC) 설치 및 생산-유통 계열화 체계 구축

- ▶ 목 적 : 고추의 품질 및 마케팅 경쟁력 제고
- ▶ 사업개요
 - 청결 위생처리를 위한 시설의 대량 보급
 - 주산지 시·군 단위로 고추종합처리장(RRPC) 설치를 지원
 - 농가로부터 홍초를 매입하여 청결한 양건 고춧가루(원산지표기, 브랜드 포장)를 가공, 출하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 계열화 체계 구축

3) 고추 마케팅 경쟁력 제고 사업

- ▶ 목 적 : 고추의 마케팅 경쟁력 제고
- ▶ 사업개요
 - 대량수요처와 계약거래를 유도하고 직거래망 구축
 - 국산 고추에 대해 전량을 원산지표기를 의무적으로 한 후 출하
 - 홍고추, 건고추, 고춧가루 등 완전 포장 출하를 유도하여(무적, 마대포장 출하 원천 봉쇄) 중국산 고추와 엄격한 차별화

4) 마늘 파종 및 수확 기계화

- ▶ 목 적 : 마늘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 ▶ 사업개요
 - 마늘 파종 및 수확의 기계화 추진
 - 열풍건조기 설치를 통한 상품성 제고
 - 농가보급형 기계 개발 및 주산지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5) 한지형 마늘 주아재배 확대 및 품질 차별화

- ▶ 목 적 : 한지형 마늘의 품질경쟁력 제고
- ▶ 사업개요
 - 한지형 마늘의 주아재배 100% 확대 추진
 - 주산단지 중심으로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
 - 친환경 재배 촉진과 게르마늄 마늘, 셀레늄 마늘 등 기능성 마늘 재배로 품질 차별화 강화

6) 마늘 마케팅 경쟁력 제고 사업

- ▶ 목 적 : 마늘의 마케팅 경쟁력 제고
- ▶ 사업개요
 - 직거래망 구축, 브랜드화, 포장화, 주산지 마늘종합처리장 설치
 - 대형수요처와 사전에 공급계약, 계약재배를 통한 주산지 농가의 안정적인 재배면적 확보
 - 마늘종합처리장을 서산 등 한지형 마늘 주산지에 집중 설치 지원하여 농가와와의 계약재배, 판매 규모화, 가공, 연구 등 집중

7) 난지형 마늘 경쟁력 제고 사업

- ▶ 목 적 : 난지형 마늘의 경쟁력 제고
- ▶ 사업개요
 - 주산지를 중심으로 대규모화를 유도
 - 파종 및 수확기계화와 주아재배를 조속히 추진
 - 마늘종합처리장을 통해 농가를 계열화하고, 가공, 판매, 대량수요처 계약 거래 등 종합적 추진
 - 타 작목으로의 전환 등 구조조정을 유도

8) 양파 가격경쟁력 제고 사업

- ▶ 목 적 : 양파의 가격경쟁력 제고
- ▶ 사업개요
 -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관작업 기계화, 시비방법 개선에 의한 노력비 절감
 - 양파 육묘 및 정식작업 생력화(팔레트 종자 파종판 파종 → 플러그 육묘 → 이식기), 피복기와 수확기를 이용한 기계화로 작업시간 축소

9) 양파 품질 및 마케팅 경쟁력 제고 사업

- ▶ 목 적 : 양파의 품질 및 마케팅 경쟁력 제고
- ▶ 사업개요
 - 간이저장고나 비가림 하우스를 이용한 통풍건조 등 수확 후 관리기술 보급을 통한 부패율 감소와 기계선별에 의한 상품성 저하 방지
 - 추파 중심의 생산체계를 춘파재배, 하우스재배, 극조생종재배 등 주년생산이 가능한 품종과 재배기술을 개발·보급, 공급의 연중 분산을 유도하여 수급 조절
 - 주산지 양파 종합처리장 설치로 수확, 운반, 선별, 예냉의 일관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비 절감
 - 계약재배 확대, 브랜드화, 소포장화 등으로 마케팅 경쟁력 제고

10) 육종 및 품종개량 사업

- ▶ 목 적 : 육종 및 품종개량 등을 통한 원예작물의 경쟁력 제고
- ▶ 사업개요
 - 화훼작물의 조직배양, 바이러스검사, 품종개량 등에 대한 지원 및 개발 확대
 - 육종 - 권리화 - 사업화 시스템 구축
 - 육종 등의 정책이 농가와 연계를 통하여 잠재농가의 지원
 - 민간 육종업체 육성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11) 외국인 노동자 등 전문인력 확충사업

- ▶ 목 적 : 외국인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한 인력문제 해소
- ▶ 사업개요
 - 법무부 협의를 통한 외국인 인력수급 확보 및 국가간 계약 체결
 - 교육시스템 개혁을 통한 외국인 노동자(다문화 가정 포함)의 교육 확대 및 양질의 인력 공급

V. 임업 발전 방향

1. 현황 및 문제점

- 소경재 위주의 산림 생산구조와 빈약한 산림자원
 - 전체 산림면적의 67% 정도가 20~40년생
-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가에 따른 산림관리 방식의 변화 부족
 - 산림에 대한 사회적 욕구에 부응한 산림관리방식 도입 미흡
-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에 능동적인 대처 미흡
 - 휴양림의 시설의 다변화 및 프로그램 미활성화
- 새로운 산림병해충 발생 증가 및 산림재해의 대형화
 - 동시다발적, 대규모의 재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필요
- 하드웨어 중심의 산촌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산촌지역 활성화 미흡
 - 산촌의 정체성, 역량 부족, 소득증진 효과 미흡 등의 부작용 초래

2. 논의 된 기본방향

- 사유림에 대한 투자 증대와 지속가능한 선순환체계 구축
- 협업 및 대리경영체제로 규모의 경영체계 확립
- 임산물의 다각화 및 판매기회의 확대
- 임산물의 클러스터화로 경쟁력 강화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3. 논의 된 신규 사업 및 과제

1) 임업과 농업정책의 통합적 추진(▶ 워크숍)

- ▶ 필요성 및 목적 : 임업을 산업적 측면에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임업정책과 농업정책을 통합화해야 할 것임
- ▶ 사업개요
 - 임업과 농업정책의 통합화를 위한 제도개편
 -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 가능 작물의 확대
 - 임산물 발전계약 요인 발굴 및 제도개선
- ▶ 기대효과
 - 임업과 농업정책의 통합화로 산업적 측면에서 임업발전 가능성 제고
 - 임업의 제약요인 개선으로 임업산업의 활성화

2) 전문임업인 육성제도의 개선 및 지원강화(▶ 워크숍)

- ▶ 필요성 및 목적 : 임업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임업후계자의 제도 개선 및 정예화
- ▶ 사업개요
 - 현행 임업후계자의 실태 조사 및 산림조합의 활성화
 - 임업후계자의 선정기준 강화 및 정예화된 전문임업인의 육성
 -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의 확대 추진
 - 임업인 수요에 부합한 맞춤형 산림경영컨설팅제도의 도입
- ▶ 기대효과
 - 기존 방만하게 운영되던 임업후계자의 정예화
 - 임업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3) 산림식재 수요 파악 및 수종의 다변화(▶ 워크숍)

- ▶ 필요성 및 목적 : 임업인들이 새롭게 요구하고 있는 수종을 파악함과 동시에 목재로 활용가능성 제고
- ▶ 사업개요
 - 현행 숲가꾸기사업의 실태 및 문제점 파악
 - 임업인들이 요구하는 수종의 파악 및 지원 정책 홍보
 - 지역여건과 환경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수종의 발굴
- ▶ 기대효과
 - 임업인들이 요구하는 수종의 공급으로 임업 활성화의 기반 조성
 - 임업의 활용가능성 제고 및 지역에 적합한 수종 보급

4) 주요 임산물의 시장잠재력 분석 및 가공산업 활성화(▶ 워크숍)

▶ 필요성 및 목적 : 충남 임산물 10선을 중심으로 시장잠재력을 분석하고 가공산업을 활성화하여 임산물의 지속가능성과 고부가가치화 도모

▶ 사업개요

- 충남 임산물 10선에 대한 시장 잠재력 조사
-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축(예시 : 밤연구센터의 설립)
- 임산물에 대한 시장수요조사 및 국내외 시장개척

▶ 기대효과

- 경쟁력 있는 임산물의 발굴과 시장성 있는 임산물 육성
- 임산물 가공산업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5) 탄소배출권 제도 도입을 통한 조림사업의 활성화(▶ 워크숍)

▶ 필요성 및 목적 :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제도를 통해 조림사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지역기업에 탄소배출권을 제공하여 친기업적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산림주와 아파트의 탄소배출권 MOU 체결
- 산림주와 지역기업의 탄소배출권 MOU 체결 활성화
- 산림주와 신규개발 사업 주체의 탄소배출권 MOU 체결 활성화

▶ 기대효과

-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의 최소화 및 지역내 개발여건의 개선
- 탄소배출권 제도를 통한 조림으로 산림주의 경쟁적 부담 경감 및 사회적 차원의 조림활성화

6) 권역별로 특성화된 산림휴양단지 및 산촌마을 조성(▶ 워크숍)

▶ 필요성 및 목적 : 충남은 내륙의 산림자원과 서해안의 해양자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바, 권역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산림휴양단지를 개발

▶ 사업개요

- 내륙지역은 산촌체험기능형 산림휴양단지로 개발
- 서해안 인접지역은 생태관광기능형 산림휴양단지로 개발
- 산림휴양단지의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모니터링 체제 확립
- 산촌마을을 중심으로 한 귀농·귀촌프로그램의 체계적 추진

▶ 기대효과

- 획일적인 산촌개발에서 탈피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산림휴양단지 개발
- 산림휴양에 대한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 충족

VI. 어업 발전 방향

1. 현황 및 문제점

○ 인구 구조적 특성 : 어업 인력구조 악화

충남 어가인구 및 어가수 현황('10년 4월 기준)

구 분	전 국	충 남	비 율
어가인구(명)	183,710	28,537	15.5%
어 가 수(호)	69,379	11,132	16.0%

※ 자료출처 : 충남 농수산분야 연구보고서

- 어가 인구수 및 어가수 소폭 상승 전망(각각 0.12%, 1.48%)
- 생산가능 인구(15~64세) 감소, 어가인구 고령화 전망

○ 수입 수산물과의 경쟁력 현황

- 수출경쟁력 강화 품목 : 연체동물 및 기타 수산동물
- 수입경쟁력 강화 품목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산동물
- 수산물 수출실적 저조
- 수산보조금 감축과 관세인하로 지역수산업 전체가 위축될 전망

○ 어업생산량 및 어가소득의 변화 전망

충남 수산물 생산량 및 생산액 현황(2010년 2월 기준)

구 분	생산량(천톤)		생산액(억원)	
	전 국	충 남	전 국	충 남
합 계	3,174	117	69,105	4,351
연근해 어업	1,227	80	36,404	3,502
천 해 양 식	1,313	34	18,468	700
내 수 면	300	3	2,735	149
원 양 어 업	604	-	11,498	-

※ 자료출처 : 충남 농수산분야 연구보고서

→ 생산량 및 생산액 모두 연근해어업 비중이 가장 큼

- 어업총생산량 2007~2012년간 연평균 1.1% 증가
- 어가소득 하향세에서 소폭 상승세로 전환

- 충남 어업분야 특화도 : 갑각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 특화계수가 1에 미치지 못하나 점차 특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품 목 별	전국 대비 생산비중		당해년 가격		
			특화계수		연 간 증감률
	2008	2009	2008	2009	
어류	3.4	4.5	0.26	0.34	30.77
갑각류	14.5	25.5	1.08	1.94	79.63
연체동물 및 기타 수산동물	5.7	6.4	0.43	0.48	11.63
패류	8.5	10.8	0.63	0.82	30.16
해조류	3.7	4.5	0.28	0.34	21.43

○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확대

○ 수산자원 생태계 변화, 갯벌의 상실과 해안선의 감소

2. 논의 된 기본방향

- 미래 수산인력 육성 및 지역선도 어업인 육성
- 양식어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강화
- 안정적인 양식어업 생산기반 구축
- 소비자 지향의 상품화 추진 및 수산물의 식품안전성 강화

3. 논의 된 신규 사업 및 과제

1) 미래 수산전문인력 육성(▶ 워크숍)

▶ 목 적 : 수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우수인력을 공급하여 낙후된 수산업에 새로운 기술과 패러다임 도입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사업개요

- 수산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대학 수준 이상의 고등교육 기관의 설립
- 기존 대학에의 수산관련 학과 신설

2) 지식·정보화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수산업 육성(▶충남 농어업농어촌 발전계획, 농정간담회, DDA 보고서)

- ▶목 적 :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
- ▶사업개요
 - 수산연구소의 R&D 강화
 - 사육·연구시설 현대화 및 내수면시험장 이전
 - 기능성 양식 어종 개발 및 초고밀도 양식 실용화 추진

3) 저탄소·친환경 수산업 육성(▶충남 농어업·농어촌 발전계획, 농정 간담회)

- ▶목 적 : 수산부문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대책의 일환으로 저탄소 친환경 수산업을 육성하여 충남도 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사업개요
 - 환경오염 절약형 어구 교체 및 고효율 저비용 어선 구조개선
 - 바다숲 조성으로 탄소흡수기능 활성화
 - 친환경 고효율/기능성 배합사료 개발
 - 생태 친화 통합관리 양식체제로 재편하여 양식어업경쟁력 확보

4)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 DDA 보고서)

- ▶목 적 : 어족자원 보전 및 노후 어장 생산력 복원 등으로 품질 향상
- ▶사업개요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직접직불제 등 공익형 직불제 도입
 - 어가단위 소득안정제 수산직불도입 법적근거 마련후 어업경영체 등록
 - 환경친화형 양식을 위한 생사료를 배합사료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어업인에 대해 경영비 증가분을 지원

5) 수산 부문 경영컨설팅 및 R&D 지원 사업(▶ DDA 보고서)

- ▶목 적 : 수산 경영체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농업부문은 경영컨설팅 관련 사업과 지원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반해 어업부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충남의 주요 양식품목인 김 등에 대한 경영체 컨설팅 사업 실시, 수산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사업 확대 필요

6) 소비자 지향의 친환경 고품질 상품화 추진(▶ DDA 보고서)

- ▶목 적 :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의 친환경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산물 경쟁력 제고 가능
- ▶사업개요
 - 명품 브랜드에 대한 식품안전성 확보 및 강화
 - 가공업체 인증제 획득지원 및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 엄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리적 표시제, 이력 표시제 추진·정착으로 수산물 안전성 확보

7)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육성 및 지원(▶업무계획, DDA 보고서)

- ▶목 적 : 어업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이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자원 관리체제를 유지가능토록 함
- ▶사업개요
 - 분쟁업종간 협의체 구성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운영
 -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 평가결과 선정된 우수공동체를 대상으로 시설비 및 수산종묘매입 방류 등의 사업 지원

8)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워크숍)

- ▶목 적 : 어업과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육성
- ▶사업개요
 - TAC 확대 및 연안어장 수산자원 DB 구축
 - 수산자원 조성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및 강화
 - 연근해 어업의 지속적인 감척과 어업자동화 시설지원 및 휴어제 실시를 통한 어업경쟁력 제고

9) 수산종묘 및 양식어업 관리(▶ DDA 보고서)

▶ 목 적 : 안정적인 소득기반 및 양식어업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어업 경쟁력 확보

▶ 사업개요

- 신품종 종묘생산 및 특화사업 추진
- 우량 종묘 선발 육종으로 전국 최대의 종묘생산 메카로 육성
- 양식어가 경영 컨설팅 및 기술지도 사업
- 고부가가치 고급어종 양식기술 개발
- 경비 절감을 위한 가두리 양식장 무인급이 시스템 개발 보급
- 수산연구 특화사업 추진
- 어류양식을 외해로 확장, 참치 등 고가어종 전략적 양식 시도
-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넙치, 전복, 김 등), 시장변화에 탄력 대응

10) 어촌 관광 개발(▶ 충남 농어업농어촌 발전계획, 농정 간담회, DDA 보고서, 업무계획, 워크숍)

▶ 목 적 : 어촌 관광레저 수요에 맞춘 어촌 관광 개발을 통해 어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함

▶ 사업개요

- 어촌체험마을 육성 및 휴양시설 확충, 프로그램 개발, 운영주체 역량 강화 등
- 전통어업(자염, 독살)과 어촌관광의 연계
 - 전통 어로방식인 독살을 복원·정비,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계승하고 어촌생태체험 학습장을 건립, 관광 자원화
- 어촌관광시설 확충 : 해양박물관, 아쿠아리움, 해상낚시공원 등

제 4 분과

농정 거버넌스 발전방향

- I. 농정 거버넌스 체제 구축
- II. 지역농협의 발전 방향
- III. 농업보조금의 개선 방향

I. 농정 거버넌스 체제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공공주도의 거버넌스 운영으로 실질적인 성과 미흡
 - 농정심의위원회, 양곡유통위원회, 농어촌특별위원회, 농업정책기획위원회 등
- 농정 거버넌스 핵심주체의 역량 및 성숙도 미흡
 - 행정, 주민, NGO 등의 역량이 미흡하고, 토론과 합의 문화 미성숙
 - 지역내 주체의 비활성화로 특정기관 혹은 인사의 중복적 참여
- 수직적·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시군·도·중앙정부간 위계적 구조로 협력적 네트워크 미구축
 - 지역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기회와 주체간 네트워크 미발달
- 내적 역량부족에도 불구하고 외부역량의 적극적인 활용 미흡
 - 공공에서는 민간부문, 지역에서는 외부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지 못함

2. 논의 된 기본방향

-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농정 거버넌스 추진
- 학습과 교육을 통한 책임 있는 농정주체의 형성
- 다양한 주체의 참여기회 확대와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 단계적 추진을 통한 농정 거버넌스의 구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

3. 논의 된 신규 사업 및 과제

1) 농정 혁신주체 육성을 위한 포럼 활성화(▶ 워크숍)

▶ 필요성 및 목적 : 절대적으로 열악한 혁신주체의 다양화와 혁신주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생산적인 거버넌스 구축

▶ 사업개요

- 농민, 조합, 시민단체,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혁신주체의 발굴
- 혁신주체간 상호교류 및 학습을 통한 혁신주체의 역량 강화
- 지역별 특성에 부합한 다양한 포럼 프로그램의 개발

▶ 기대효과

- 농정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주체의 발굴
- 농정 거버넌스 혁신주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생산적인 거버넌스 구축

2) 농정 거버넌스를 지원하기 위한 재능기부자 제도의 도입(▶ 워크숍)

▶ 필요성 및 목적 :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는 농촌지역의 혁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의 다양한 혁신역량을 유입하기 위해 재능기부자제도를 도입

▶ 사업개요

- 관련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재능기부자 확보·운영
- 도농교류에 의한 자매결연을 통한 재능기부자 확보·운영
- 출향인사와 네트워크를 통한 재능기부자 확보운영

▶ 기대효과

- 외부의 재능기부자를 통해 농정 거버넌스의 역량 강화 및 새로운 가능성 제고
- 재능기부자와 관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귀농·귀촌의 기반 마련

3) 기존 농정거버넌스의 전략적 개편(▶ 워크숍)

▶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시군별, 도 차원에서 산재되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농정 분야 거버넌스의 통폐합

▶ 사업개요

- 현재 시군별, 도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실태 파악
-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참여주체의 중복성 분석
- 각종 위원회의 전략적 통폐합 및 행정부서의 단일화

▶ 기대효과

- 형식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기존 농정거버넌스의 재편
- 농정거버넌스 참여주체의 중복성 해소 및 다양성 확보

4) 주민 자발적 계획수립 및 모니터링체제 확립(▶ 워크숍)

▶ 필요성 및 목적 : 상향적 농정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의 확보

▶ 사업개요

- 주민자발적인 마을발전계획의 수립
-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풀의 구성
- 주민주도의 성과목표 설정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

▶ 기대효과

- 주민자발적인 마을 발전계획의 수립으로 농정 거버넌스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회 확보
- 주민 스스로의 성과목표와 모니터링 체제로 사업성과 제고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II. 지역농협의 발전 방향

1.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 농협법 개정(2011년 3월 11일)에 의해 경제부문의 사업내용 변화
 -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판매, 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로 이관,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여타 경제사업(자재, 정책사업 등)을 경제지주로 이관
 - 중앙회 보유 자본에서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본을 우선 배분토록 규정하고, 중앙회는 자본실사 후 확정된 자본금 30% 이상을 경제 부문에 배정
 - 전문기관,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투자계획, 자회사 설립 및 지주회사 편입방안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토록 함
 - 경제사업에 대한 평가 및 경영지도,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해서 농업인 단체 대표, 유통전문가, 중앙회 임직원, 일선 조합장으로 구성된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
 - 중앙회의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을 분리하여 농협금융 지주회사 설립하여 농업 금융업무를 수행토록 하되, 농축산물 생산, 유통, 판매 자금 및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자금을 우선 지원
- 농협협동조합의 정체성 약화
 - 조합원의 이질화와 고령화, 민주적 운영제도의 미비, 농협집행부 조직문화의 문제점, 사업참여 조합원의 감소 등으로 농협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 단순한 합병론, 품목조합 육성론, 연합 사업론 등의 부분적 처방으로는 정체성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음
- 추진주체로서 협동조합직원의 협동조합운동가로의 전환과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품토 조성이 필요하며, 진정한 협동조합 지도자를 육성하여야 함

○ 농협을 포함한 지방농정 관련 주체의 거버넌스 부족

- 농협을 포함하여 도 및 시군 행정조직, 농어촌공사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다양한 주체에서 다양한 농정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통합되지 못하고, 연계성 부족 및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2. 논의 된 기본방향

○ 지역농협 혁신의 기본방향

- 운영민주화 : 충남지역농협에서 지속적으로 임직원 비리사건이 발생, 정보공개미흡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운영민주화는 조합사업 활성화의 기본 전제임
- 적정규모화 : 충남농협의 합병농협은 30개소이며 2개 읍면 합병이 많은 실정으로, 예수금 규모가 낮은 상황에서 생활권 단위 합병 필요
- 연합사업 : 신경분리와 연계함 조합공동사업 등 연합사업 활성화 필요
- 신사업 개발 : 농촌여건에 대응하는 신사업 개발이 필요(예: 대전과 연계한 학교급식, 사회적 기업 육성 등)
- 행정협력 강화 : 충남은 타 시도에 비해 농협-행정 연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협력관계 구축 강화 필요

○ 지역종합센터로서의 역할 정립

- 지역농협은 현재의 단순한 사업적 구조에서 벗어나 복합적이고 네트워크화된 사업체제에 대한 최종적 소유권과 통제권을 지닌 지역농업농촌의 협동조합적 허브(hub)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
- 구매-판매라는 생산자협동조합의 기본 기능을 중심으로, 기존의 신용사업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새롭게 요구되는 이중협동조합의 기능을 통합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사업이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한 지역종합농협으로서의 역할 정립

3. 논의 된 신규 사업 및 과제

1) 지역농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 ▶ 목적 : 농협 연합사업 및 신사업 개발과 행정협력 강화를 위한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 ▶ 사업개요 : 충남도-농협도본부-시·군 3자 매칭 지역농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2) 3자 협력 워크숍 개최

- ▶ 목적 : 지역의 자원을 결합하여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수평적 네트워크, 수평적 파트너십 형성
- ▶ 사업개요 : 행정·농협·농민지도자의 3자 협력 워크숍의 정기적 개최

3) 지역종합농협 체계 구축

- ▶ 목적 : 지역농협의 지역종합센터로서의 역할 정립
- ▶ 사업개요
 - 구·판매사업 : 대규모 APC를 통한 규모의 경제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작목을 제외한 중소규모 작목의 지도·상품화 작업
 - 신용사업 : 면단위 상호금융사업을 추진하며, 공제, 연금관리 등 사업영역의 다각화 실행
 - 지역개발사업 : 광역화된 농촌관광사업을 총괄관리하고, 지속적인 관광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유치활동의 전개
 - 생산지도 사업 : 조합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매년 조합원의 생산계획 및 경영지도 진행
 - 교육사업 : 협동조합 조합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원리, 변화방향, 조합원의 역할 등 구체적인 정보를 교육
 - 복지사업 : 노인, 문화, 영유아 탁아, 방과후 교실 등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효율적인 사업 운영, 일부 정부위탁사업 대행

Ⅲ. 농업보조금의 개선 방향

1. 현황 및 문제점

- 농가에 대한 직접보조 정책인 직접지불제는 2001년 논농업직불제의 도입과 함께 농가소득 지원(보전)의 주요 수단으로 정착
 - 2002년 쌀소득보전직접지불('02~'04) 도입, 2005년 논농업직불과 쌀소득보전직불을 통합 새로운 쌀소득보전직불제(이하 쌀직불제)로 개편 시행 중
 - 이 외에도 현재 시행 중인 직불은 경영이양(1997), 친환경농업(1999), 조건불리지역(2004), FTA피해보전(2004), 경관보전(2005) 등 총 6가지의 직불제 시행
- 2011년 농업예산 14.9조원 중 농어가 등 개별경영체에 대한 보조는 2조원(13%), 직불금 2.2조원(15%), 융자 3조원(20%), 투자 4.2조원(28%), 기타 3.5조원(24%) 임
 - 개별경영체 보조는 농어가·생산자조직·개별업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이차보전, 시설장비 지원, 투입재 지원 등을 포함
 - 직불금은 쌀고정직불 등 9종의 직불제가 1조 6,277억원, 재해보험, 연금보험료 지원 등 기타 직불성이 5,439억원 수준
 - 직불제 지원금(1조 6,277억원) 중 쌀 관련 직불제가 1조 4,188억원, 87%를 차지, 특정품목 편중지원·재정 과다소요 등 논란 야기
- 농업보조금정책의 개선 요구 증대
 - 보조금 논쟁은 UR 이후 국내의 정책문제의 수준을 넘어 공정한 무역경쟁을 방해하고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는 논리로 국제적인 규제의 대상이 됨

- 우리의 경우 그동안의 보조금 정책이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많았다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으며, 보조금정책의 개선이 주요 정책과제로 논의 중임
- 정부 의존적 경향이 심화되면서 농업의 자생력 약화를 초래하고 구조조정의 지연, 과잉생산 유발, 쌀에 편중된 직불, 예산·기금 집행 및 관리체계에 비효율적 요인이 존재, 보조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농정불신의 요인으로 작용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와 농가소득 보전 등 각각의 목적에 따른 직불제가 사업별로 추진되면서 종류가 늘어 제도의 단순화와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됨

2. 논의 된 기본방향

- 농업보조금을 지역활성화 기회로 활용
 - 국가보조금사업을 지역공공재의 생산,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협력
 - 국가보조금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보조금사업으로 지역의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농업인이 직접 참여에 의한 합리적인 보조금사업 개혁 추진
 - 농업보조금 문제 개선을 위해 보조금 계획, 평가, 집행 등 일련의 과정에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
 - 보조금 정책수립자(행정)와 정책수혜자(농업인)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체계의 구축
 -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꼭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지급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 대한 엄격한 평가 및 사후관리가 필요

3. 논의 된 신규 계획 또는 과제

1) 보조금사업 리스크 평가 및 사후관리 기반 구축

- ▶ 목 적 : 보조금사업의 역기능의 최소화하고 보조금 낭비를 방지하며 사업효과를 극대화 함
- ▶ 사업개요
 - 보조금사업 리스크 평가 : 보조금사업 자체에 따르는 실패의 리스크(역기능)를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춘 후 최적 규모와 엄정한 집행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 보조금사업 관리 매뉴얼 구축 및 시행 :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구비, 정확한 대상자의 구분 및 선택, 자금의 전달,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평가 등에 관한 관리 매뉴얼을 구축하고 시행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2) 개별경영체의 ‘일몰제’ 도입

- ▶ 목 적
 - 보조금사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 사업개요
 - 경영체별 일몰제 도입 : 개별 경영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별로 일정한 기준 적용보다는 경영체별로 일정 기간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졸업시키는 일몰제 도입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의 지원은 약과 독이 될 수 있는 양면성이 강하므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리 원칙 준수 필요

3) 지역 공공재에 대한 직불금 확대 추진

- ▶ 목 적 : 국가의 지원이 없는 지역공공재의 생산 및 유지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 고유의 사업의 추진
- ▶ 사업개요
 - 비용보조경관직불제 도입 : 지역의 향토문화, 경관 등 지역공공재를 유지를 위한 지역 자체적인 직불제를 도입·추진